



“최저가 아니면 보상” 유통가 ‘10원전쟁’ 16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은 우즈 21

오세훈 “민간 주도”... 동력 잃은 공공개발

못시장 “민간 규제 풀어 5년간 18만5000가구 공급”
정부-서울시 벌써부터 신경전 “주택정책 표류 우려”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여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의 유탄을 맞았다. 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서도 민간사업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 주도 개발을 박하게 평가해왔다. 그는 최근 “(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도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5년 동안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 주도 개발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장에 공기업 참여,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는 대가로 규제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시해왔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규제를 완화하면 공공 주도 개발은 그나마 있던 비교 우위마저 잃을 공산이 크다.

공공 개발 사업 후보지에선 벌써 동요가 감지된다. 적잖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민간 사업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지난주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재개발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후보지 일부에선 일찌감치 민간 개발을 선언하며 공공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중앙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자치체·기초자치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 구청장들도 25명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률과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회와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역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의 절충 없이는 오 시장 단독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란 뜻이다. 중앙정부, 입법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국회, 시의회가 공조를 이루지 않으면 주택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선거참패’ 與지도부 총사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 사퇴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대행과 지도부가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혁신기술 개발하면 뭐합니까? 사업화 꿈도 못 꾸는데” 규제에 무너지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노다지가 널려 있는데 쉼 수가 없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 대표는 건강 보험에 기반을 둔 한국의 풍부한 의료 데이터를 보고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업화까지 갈 길이 멀다. 빅데이터·AI 기술이 총집합한 기기로 질병을 탐지해도 이용자에게 내원 권유를 하면 불법이다. 의료법상 진단 행위로 간주해서다. 혁신은커녕 기존 질병 탐지 기기와 차별성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의료 데이터를 결합,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틀어막고 있다. 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가공하려면 ‘가명 정보’로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이 특정될 수 없게 처리해야 한다. 재식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차후 재식별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현재로서는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A사는 상품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바이옴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아우성은 여전히 크다. 8일 아산나눔재단의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 유일 ‘원격의료’ 금지국 사업화 후속투자 유치 기대이하 규제 해소·투자 확대 대책 절실

어 스케일업’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창업 단계에서 활발한 투자를 받지만, 사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후속 투자 유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원활하지 않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설립에서 시드머니를 받기까지 평균 1.88년, 시드머니에서 시리즈A를 받기까지 평균 1.8년이 걸린다. 시드머니에서 시리즈B까지는 약 2.8년이 소요된다.

반면 국내 고성장 스타트업들은 설립에서 시드머니를 받기까지 평균 1.5년, 시드머니에서 시리즈A를 받기까지 평균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시드머니에서 시리즈B까지는 2.5년이 걸린다. 초기 창업(시드)에서는 차이가 0.3년이지만, 이후 사업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1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복잡한 인증도 문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스타트업 C사는 무의미한 인증 제도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D 시리즈A는 일반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 직전까지의 기간에 받는 투자를 지칭한다. 시리즈B는 회사가 일정 규모를 갖춘 뒤에 받는 투자를 이른다. 대대적인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이 자금 수혈의 목적이다.

해야 했다. 한국은 명시적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에 스타트업들의 혁신 동력도 함께 사그라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료 벤처투자 규모는 2019년 1조1033억 원에서 2020년 1조1970억 원으로 8.49% 늘었다. 하지만 이는 화학·소재(45.75%), 전기·기계·장비(34.48%), ICT제조(25.18%)의 상승 폭에 비하면 초라한 성장률이다.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원격의료에 앞서 구축되어야 할 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의료계 반발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도 단 한 건이 없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이다원 기자 leedw@

코로나 ‘4차 대유행’ 공포

신규확진 다시 700명대... AZ 접종재개 여부 11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1월 이후 3개월 만에 700명대에 들어섰다. 최근 들어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으로 사실상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으로, 올해 1월 7일 869명이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400명 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던 상황이 500명대, 이어서 600명대, 오늘은 700명까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발생 규모가 크고 재생산지수(1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시키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높으며, 전파력이 높고 위·중증도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당분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43.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섰다.

11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9일 발표된다. 현재는 거리두기 상황보다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논란과 장기간 지속되는 방역에 따른 피로 누적,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날 “국내 집단면역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블링, 즉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서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던 만큼 이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EMA)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등을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 재개 여부는 11일 공식 발표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네이버파이낸셜, 배송 다음날 100% 정산

글로벌 업계 최초...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움”

중소상공인(SME)에게 배송완료 다음 날 정산해 주는 네이버파이낸셜 ‘빠른정산’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회전이 이뤄져 SME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빠른정산’ 서비스 지

급 비율을 배송완료 다음 날 9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담보나 수수료 없이 판매대금의 100%를 전액 조기 지급하며 정산 규모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구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담보나 수수료 없이 판매대금

의 100%를 배송완료 하루 만에 지급하는 것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서 처음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서비스 시작 후 4개월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거래 및 판매자를 선별하는 ‘위험탐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SME를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혜택을 늘렸다. 현재 빠른정산으로 4개월간 지급된 누적 판매대금은 3월 말 기준 약 1조4000억 원이다.

조성준 기자 tati@

〈유럽의약품청〉

EMA “AZ, 혈전 부작용 인정”

제조국 쫓아져 “다른 백신 맞아라”

영국과 유럽의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특이 뇌혈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날 안전성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에서 “혈소판 감소를 수반하는 특이 혈전 발생 사례는 AZ 백신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백신 자문기구인 백신 접종 및 면역공동위원회(JCVI)도 이날 AZ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문 뇌혈전 부작용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국 당국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연령층은 가능하면 AZ 이외의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영국과 유럽 보건당국 모두 이러한 사례는 지극히 드물다며 백신 접종 혜택이 그 위험보다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EMA는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AZ 백신 접종 권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당국의 발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혈전과 관련한 AZ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는 백신 부작용 우려로 각국에서 접종 예약 취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EMA와 영국 당국의 발표 이후 유럽 각국에서 AZ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는 향후 60~65세 연령에만 AZ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으며, 벨기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56세 이상에게만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보건 당국은 6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EMA는 지난달 AZ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백신 60%가 AZ인데... 공급 ‘비상’

정부, 60세 미만 접종 보류

모더나-얀센 등 도입일정 ‘깜깜’ 일각선 “중국·러시아 백신이라도”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희귀 혈전 생성 간 인과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중단했다. 상반기 도입되는 백신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AZ 백신인 만큼 상반기 1200만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국내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유럽의약품청(EMA)이 백신 접종과 희귀 혈전 생성 간 인과성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선제적으로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특수교육·보육 교사,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잠정 미뤘고, 현재 AZ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국민에 대한 접종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 결정으로 접종이 연기된 대상자는 14만 2202명이고, AZ 백신 예방접종 대

백신도입 일정 (단위: 만 회)

□ 도입 완료 □ 도입 확정

	2월	3월	4월	5월	6월
코백스			43.2	166.8	
아스트라제네카(210만 회)					29.7
화이자(41.4만 회)	11.7				
아스트라제네카(857.4만 회)	157.4				700
화이자(700만 회)		100	25 75		500

상자 가운데 60세 미만으로 접종이 보류된 사람은 3만 8771명이다.

문제는 상반기 도입 예정인 백신 1808만 8000회분 가운데 AZ 백신이 1067만 4000회분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층에 대한 AZ 백신 접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면 상반기 내에 1200만 명 접종을 완료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역시 “현재까지는 접종이 한시적으로 보류돼 있지만, 2분기 계획이라든지 11

월 집단면역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부터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던 안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은 현재까지도 도입 물량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간 백신기술 도입 계약(기술 라이선스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만큼 원재료만 무리 없이 공급된다면 생산량 전량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과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대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AZ 백신 접종 재개와 관련한 향후 일정을 11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오~나라

가

인증한 전문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한 요양보호사 체계적이고 전문적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더 좋은 돌봄, 요양보호사의 존중으로 시작됩니다

- 신체지원
- 가사지원
- 정서지원
- 일상지원
- 인지활동지원 등

어르신들의 일상을 돕는 전문적인 돌봄

※ 요양보호사에게 욕설,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문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상담 | 1577-1000

치매상담 | 1899-9988



멈춰버린 AZ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보류·연기되며 오늘부터 특수교육 직군 AZ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광주 북구예방접종센터(전남대 북구국민체육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격상보다 특화방역 검토”

권덕철 장관 “국민 피로도·경제 고려 집단감염 업종에 집중”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최근 감염이 발생한 곳에 특화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률적인 단계 인상은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했던 국민이나 업종에서 늘어난 상당한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일부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단계가 적용 중이며 나머지 지역은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이날 700명까지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증가세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특정 업종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일부 업종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나오는 경향이 있고, 업체와 협회에서 (확산 차단을) 해보겠다는데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곧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한편, 1분기 예정된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추가 물량 확보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AZ백신은 접종 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증 부작용과 연관성이 발견돼 60세 미만, 보건교사 접종이 보류되고 있다. 다만 이날 새벽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위험요인이 있지만 접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내 백신 접종도 재개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젊은 계층에서 면역 반응이 조금 더 세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도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청이 EMA 결과를 검토하고 곧 접종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서울 공공 개발 후보지도 '민간 선회' 저울질

오 시장 "민간사업 활성화" 공약
 용적률 제한 풀리면 바뀔 가능성
 후보지 주민 "정책 살펴보겠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넘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 정비사업의 핵심은 규제에 묶인 민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과 빠른 사업 진행 약속이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정비 구역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합은 굳이 공공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주요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내부에선 벌써부터 "오 시장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목소리가 커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의문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주요 구역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제시하는 인센티브와 함께 앞으로 완화될 민간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른 사업성 등을 '저울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철1구역 관계자는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말을 했으니 곧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며

명칭	개요	예상 공급물량	발표 시점	진행 상황
공공재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기존 민간사업 대비 빠른 사업 추진.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서울 내 7만 가구	2020년 5·6 대책	2차 사업지 발표
공공재건축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 촉진 사업.			1차 사업지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	서울 내 총 32만 가구	2021년 2·4 공급대책	1차 사업지 발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기업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미정

"이곳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 정비사업 정책이 바뀌면 LH 등이 제시하는 혜택과 비교해 보고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인 성북구 강북5구역 역시 공공 대신 민간 재개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북5구역 관계자는 "주민들은 사실상 민간 재개발을 원하지만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해 공공 정비사업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공공사업에 좋은 조건이 많아서 선호하지만 오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할지 보고 더 괜찮다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은 법적 용적률의 120% 선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오 시장이 공공 정비사업보다 더 높은 용적률 완화를 제시하면 정비구역은 그만큼 수익성이 더 늘어나므로 공공 대신 민간 정비사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민간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

면서 구역 내에서는 '공공대 민간' 사업으로 의견이 나날 수 있다. 기존에는 공공 정비사업 한 가지뿐이었지만,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일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셈이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은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재개발 조합 등은 공공 이익이 아니라 개인 이익을 우선하는 곳으로 공공 개발 등을 신청한 지역은 그동안 민간 규제 등으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대다수"라며 "오 시장이 얼마나 규제를 풀지 지켜 봐야겠지만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한 공공 정비사업을 택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핵심 규제는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공공 정비사업을 선택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공재개발 후보 구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분양가가 가장 문제인데 공공재개발 구역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며 "서울 시장이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줄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선택하려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거나 다른 유인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들쭉'

한강변 '35층 제한' 해제 기대감, 매매 호가 수억씩 올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으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선 오 시장 당선 이후 추가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8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 호가는 한 달 전보다 수억 원씩 올랐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 철폐 기대감에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형평수(전용면적 156㎡)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새 호가가 2억~3억 원가량 올랐다"며 "아직 실거래 등록은 안 됐는데 얼마 전 전용 156㎡형이 신고가인 29억8000만 원에 팔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56㎡형의 직전 거래가격은 27억8000만 원(7층·2월 10일 거래)이었다. 현재 호가는 같은 평형 기준으로 30억~32억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물건은 1층으로 이 역시 현재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오른 28억 원이다.

여의도동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

시장 취임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하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며 "현재 매수 문의는 많은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아파트 역시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매 호가가 치솟았다. 인근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재건축 완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미 두 달 전부터 조합 설립 등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오 시장 당선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현대1·2차 아파트 전용 131㎡형은 이날 기준 최고 호가는 40억 원으로 지난달 29일 실거래가 36억5000만 원(4층)보다 3억5000만 원이나 올랐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대상주 단지로 꼽히는 현대7차 아파트 전용 245㎡형은 5일 80억 원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이 많다.

관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시장의 권한이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개발 기대감에 들 때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정정보도] 「강남 5개 자사高 '강제이전' 추진」 보도 등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8일 위와 같은 제목 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5개 자사고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강남8학군 내 자사고 뉴타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재 2025학년도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생배치(배정) 방안 마련 및 2025

학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른 기존 일반고와 균형배치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배치(배정)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외부에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 활용의 정점을 찍다!

PAY의 활용 정점

자유롭게 어디서든 금융까지

자유롭게 활용!

카드, 은행계좌, 포인트 등록으로 다양한 결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KB Pay

어디서나 활용!

MST, QR코드, 바코드, NFC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활용하는 KB Pay

금융까지 활용!

국내외 송금, 멤버십 적립, 소비관리까지 결제를 넘어 금융까지 활용하는 KB Pay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10107-00035-ADP(21.01.07 기준)



규제 풀어 '5년간 36만 가구 공급' 속도가 관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구상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18.5만
상생주택 7만·모아주택 3만 등

박원순표 '35층 룰'은 폐지 전망
완화 때마다 정부와 마찰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서울 주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에 보조를 맞추던 서울시는 전면적인 주택 정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오 시장이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정책 10년 만에 새판=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전 1순위 공약은 '스피드 주택 공급'이었다. 정부의 규제에 가로막힌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표 36만 호'는 크게 네 개 열개로 짜여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를 비롯해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6만 호 공급의 가장 큰 뼈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나오는 물량으로 36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활성화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기준을 완화해 10만 가구를 확보한다. 1년 안에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나온 5만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부동산 공약

공약: 스피드 주택공급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18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 ① 정비지수 폐지 통한 3만5000가구
- ②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기준 완화 통한 10만 가구
- ③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 통한 5만 가구

- ①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 ② 재산세 과세 특례 기준, 6억 원 → 9억 원

가구를 더해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지수 폐지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으로 서울시가 2015년에 도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고집하던 '35층 룰'이 폐지될지도 관심사다. 오 시장은 주거용 건물을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 플랜 2040'에서 35층 룰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의 공급 방안이다. 방지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해당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급 타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돼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아주택은 도심 내 소규모 집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것이다.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 개발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소형 재건축 방식이다.

◇관건은 속도=관건은 속도다. 오 시장은 이미 이번 보궐선거전 때부터 주택 공급의 방법론, 즉 '속도'를 수차례 자신했다. 취임 100일 안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확 풀겠다는 약속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을 통합하는 구상도 내놔다. 통합 부서를 한시적으로 시장 직속에 두고 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난관도 예상된다.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는 고작 1년 2개월인 반면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기간은 무려 5년이다. 연임을 해야 공약 완주가 가능한 셈이다.

오 시장이 박 전 시장 흔적 지우기와 강력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정부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며 불편한 동거를 보인 사례가 재현될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순 있다"면서도 "짧은 서울시장 임기의 한계와 정부와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별 들까

규제 완화 시그널

주거정비지수 폐지 나서면
해제됐던 100여곳 재기 발판
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
일각에선 '시프트' 부활 예상



서울 시내 주거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다시 들쭉인다. 뉴타운 사업을 이끌던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 시장에 복귀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뉴타운 사업은 건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일종의 재개발 사업이다.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2년 도입돼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305개 구역이 지정됐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성장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을 반복했다. 도입 초기엔 서울 집값을 주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사업 차질과 주민 갈등을 호소하는 구역이 여기저기 생겼다. 1기 오세훈 시장이 끝나고 박원순 시장에서 100곳 넘는 뉴타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자 살아남은 뉴타운들은 다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이 무리

하게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잠재적 주택 공급량 손실은 24만8893가구에 이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사업 정상화를 공약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오 시장은 "기준을 완화해서(뉴타운 사업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주거정비지수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비지수 폐지는 건축물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제구역이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해제구역에서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못 준다는 비판에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 시장 당선에 벌써 시장에 뉴타운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고 있다. 벌써 매물이 모습을 감추고 호가가 뛰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옛 장위13구역에선 시장 선거 직후 대지분 26㎡짜리 빌라가 2억 원에 나왔다. 지난 연말 실거래가(1억 원)보다 두 배가 뛰었다.

이런 흐름은 정부가 바라는 옛 뉴타운 활용법과 부딪힌다. 최근 정부는 신길뉴타운, 장위뉴타운, 수색·중산뉴타운 등의 해제구역을 잇달아 공공 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기업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시프트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중형 임대주택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 집중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시는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멈춘 상태다. 다만 문제인 정부도 지난해 소득 8분위(소득 상위 30%)까지 임대주택 면호를 넓히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선 오세훈 시장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

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직후 첫 출근에 나선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부동산 정책을 사이에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중앙정부의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건 서울시장의 행정력 권한이 그만큼 크고 말 한마디의 파급력이 막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공약한 대로 '35층 룰'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35층 층고 제한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서울시가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조례 변경 없이 새 시장이 어렵지 않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플랜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상위 개념이다.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09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뒤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더 강화됐다. 과거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여의도·용산 개발과 관련해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시장 권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자체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별 기부채납과 용적률(층고), 가구 수, 임대주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비율 조정 등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해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인허가와 착공 등이 진행되긴 어려운 이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지수제도도 서울시가 도입한 만큼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반면 오 시장이 내건 공약 중에는 서울 시장 재량 밖의 것들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거나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사·도지사 권한이 앞으로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민간 사업은 중앙 정부의 협조가, 공공사업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엇박자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총 109석 중 101석 민주당>

시의회에 “도와달라”...광화문광장·도시재생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능숙하게” 첫날부터 팍 찬 일정 與 협조 구하고 예방접종센터 방문해 긴급회의 예고 박원순표 사업 축소...안철수 공동경영 시일 걸릴 듯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서울시정으로 돌아왔다. 2011년 8월 26일 사퇴한 뒤 3514일 만이다. 그는 공식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세훈호’ 출범을 알렸다. 오 시장의 귀환으로 서울시정은 급변할 전망이다.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도 총련사 방문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직원들 보니 무거운 책임감” =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정 출근길에 “환영해 주는 서울시 직원을 보니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비록 임기 1년 남짓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최선을 다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여러분 노력으로 바뀌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 정말 잘 모시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9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하고 있어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 방문 이후 “예감이 좋다”고 언급했다. 그는 “걱정이 많았는데 의장단 방문 후 마음이 놓였다”며 “꼭 막힌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1호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성동구청을 찾아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으로부터 백신 접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서울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4명 발생했다.

오 시장은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둔화시킬 수 있을지 내일 긴급회의를 준비할 것”이라며 “확산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 보여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후보와 공동경영 반드시 성공” = 오 시장이 서울시정으로 돌아오면서 서울시정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공동경영’을 펼친다는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후보 신분으로 현장 유세를 다닐 때마다 “안 후보와 서울시 공동경영을 성공시켜 모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이 공동경영의 구체적 방법을 ‘당선 이후’로 미뤄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동경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박원순표’ 사업도 축소·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이 있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업을 두고 “전임 시장이 시작한 일을 함부로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광화문광장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종로구 창신·송인 도시재생사업으로 10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개인 돈이 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돈이 들었나. 혈세를 그렇게 써서 이 일대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은 취임 첫날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공식 1호로 결재했다. 소상공인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오세훈 서울시장의 8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임기 15개월 시장, 초대형 인사 태풍 예고

서울시 조직 어떻게 바꾸나 부시장단·기획조정실장 바뀔 듯 ‘20년 보좌’ 강철원 재임성 유력 민주주의위·청년청 등 개편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의 8일 첫 출근하면서 서울시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새 시장을 맞는 만큼 인사와 조직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서울시 1급 이상 고위간부들은 시장이 바뀌면 관례적으로 모두 사표를 제출한다. 2011년 10월 27일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다음 날 시장 권한대행으로 일한 권영규 행정1부시장과 김영걸 행정2

부시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9개월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석인 주요 보좌이나 산하기관장 인사도 관심사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경 청년청장,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이 사직해 비어 있다. 또 국제관계대사, 서울혁신기획관, 국제협력관, 공공개발기획단장도 공석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서울정책재단 이사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서울연구원장,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서울관광재단 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등은 현재 공석이거나 사직·임기 만료로 교체해야 한다.

오 시장을 도운 캠프 인사들과 당내 조력자들이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을 16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보좌해 왔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재임성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이창근·문혜정 씨도 주목된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단일화 실무협상단에 합류했던 권택기 전 의원도 서울시 입성이 점쳐진다.

대규모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의 주요 사업을 이끌어온 핵심 부서에 대한 개편은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회를 비롯해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등이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서울시, 일자리·주택난·저성장 극복해야”

실업률 2018년부터 3년 꼴찌 주택보급률 100% 미만 유일 GDP 기여도 갈수록 떨어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서울시 3대 난제인 일자리·주택난·저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해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가 380만 명으로 23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이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 홀로 사장이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14.5% 감소한 23만6000명이었다. 나 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 명으로 5.2% 늘었다.

주택난도 언급됐다. 한경연은 2019년 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인 주택보

급률을 보면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미만인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2019년 42.7%로 감소했다.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할 경우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44.6%→42.7%)과 인천(60.6%→60.2%)뿐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점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반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증가해 지난해 평균 10억9993만 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만성화된 저성장 기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0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지만 2019년에는 22.5%로 떨어졌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가운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고 있어 대내외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 고통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 총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991만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명 줄었다. 서울시 인구감소율은 2010~2020년 연평균 0.6%씩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김대영 기자 kdy@

이제 檢의 시간...뭇 ‘내곡동’朴 ‘엘시티’ 수사

기소 여부 따라 정국 파장 재직 중 확정 판결 어려워 ‘與 대선 흠집내기용’ 분석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야가 쏟아낸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99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다수 접수됐고, 흑색선전 사범 사건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차례 고발당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해 ‘6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됐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신임 시장을 비롯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단체 한 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중진들이 지난해 17일 부산 엘시티 앞에서 개최한 ‘박형준 부산 시장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기자회견 모습. 뉴스시스

(한번)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춌불연대는 용산참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오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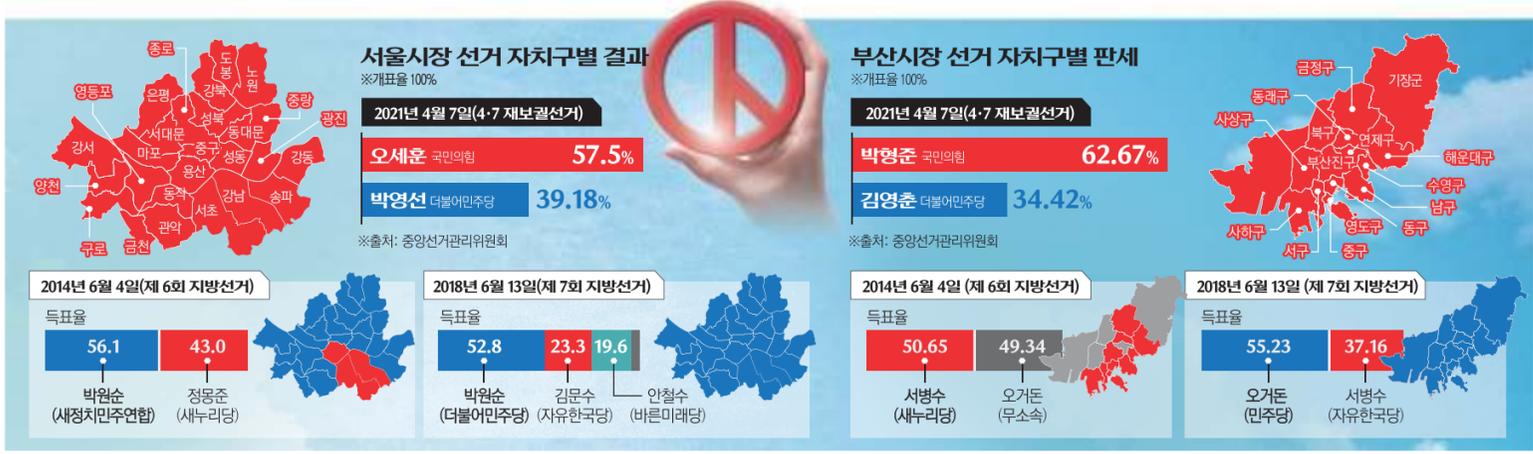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실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

찰이 수사 중인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용산참사 철거민 명예훼손 의혹, 박 시장의 엘시티 의혹 등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고발 건 대부분이 사실 관계 다툼이 거의 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인 만큼 검찰의 법리 해석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결국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박 시장을 고발하면서 ‘당선무효형’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진실공방을 이어가며 상대 진영을 흠집 내기 위한 용도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의 임기가 15개월 후 만료되는 만큼 시장 재직 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종용 기자 deep@



민심 확인한 文대통령 국정기조는 유지할 듯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 등 국정 방향 변화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재보선 관련,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상을 넘어선 큰 패배에 청와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정권 재창출마저 불투명해졌다는 불안감이 엮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이번선거 과정에서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국정 장악력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차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의 불뚱이 청와대로 될 우려도 있다. 이미 여론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시작된 민심 이반이 추미애 사태, 청와대 참모 부동산 투기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선거에 악영향을 준데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후보를 내는데도 문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점 등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질책 엄중히 받겠다 흔들림없이 요구 실현 노력” 책임론 靑으로 불뚱 될수도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현재의 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부동산 공급 정책, 코로나 방역 대책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의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더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결실이 나오느냐 여부다. 주택 공급에는 수 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 상황은 4차 대유행을 우려할 정도로 위태롭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확인한 공직사회가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조만간 차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 청와대보다는 유력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정국 구도가 재편될 공산도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기조 유지 노력은 정국 반전의 기회로 작동하기 보다는 고집이나 집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경기 회복, 코로나 백신 등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의 해결이 미진할 경우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검토가 있을지를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

김태년 “민심 부합 혁신 선도할 것” 임시 비대위원장에 친문 도종환 의원 16일 원내대표·내달 2일 당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정권 말에 치러진 이번 4·7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41개 자치구에서 빼어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쇄신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 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이 정점을 찍었다. 사실상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강하게 쏠리며 득표율을 두 자릿수 격차까지 벌렸다.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거둔 민주당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레임덕까지 반증하며 내년 정권 재창출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애초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5월 9일경 후임 대표를 선출하고, 곧 1년 임기를 마치는 김태년 대행 후임 원내대표도 이후 뽑을 예정이었다.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야 민심 이반 사태에 직면한 이날 지도부는 전원 사퇴를 결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4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5월 2일 새 당대표를 뽑기로 했다. 김태행은 “새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저희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태행은 “민주당은 세 번의 집권 경험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정력 있는 국민의 정당”이라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 국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고 나아갈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쇄신에 전념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도부 전원이 허리를 숙이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드러냈다.

내주 원내대표 경선에는 윤호중·안규백·김경협·박완주 의원이, 내달 2일 당대표 경선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재보궐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데에 지도부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향후 내로남불 사례에 대한 원칙적 대응 내용을 비대위에서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또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자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단체행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뚜껑을 열고 나서야 절감했다는 당 내부 분위기도 있다”며 “초선 의원들도 중지를 모아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기념액자를 받으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쓴소리’ 남기고 떠난 김종인 “자신들이 승리한 걸로 착각 안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선 바로 다음 날인 8일 수장직을 내려놨다. 이는 곧 야당의 압승에 힘이 실린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도 이를 염려하듯 이날 진행된 고별 기자회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 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런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며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압승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각축전 분열·반목 수면 위로 靑 대표 재추대 가능성...주호영 “민심은 혁신·야권 대통합”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우려대로 이미 당권을 노리는 인사들은 물밑 작업, 수싸움에 돌입했으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놓고 이미 논쟁도 시작됐다.

우선 전당대회의 시점도 변수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기현, 권성동, 유이동, 김태홍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주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을 포기한다면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진석,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김무성,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설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미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당내에 팽배하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생각했던 것이 상으로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나가고 무주공산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연인이 된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관심도 높다. 김 위원장을 당 대표로 다시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물론 당권을 노리는 중진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당 대표로 다시 추대하지는 목소리도 나올 순 있지만 당권을 노리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김 위원장을 붙잡자고 하면 거기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압승을 위해 함께 뛰어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성난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혁신과 야권의 대통합”이라며 이같이 말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n@

정일환 기자 whan@

준법감시필 2021-0271

인생금융
전문가 삼성생명FC



FC님께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주시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쉽고 편하네요~



오늘도 고객님들을
디지털로 더 가깝게 만날수 있어
좋아요



디지털로 더 가까이, 지금 삼성생명 FC를 만나보세요!

삼성생명 디지털파트너를 만나보세요

삼성생명 디지털활동지수 [DQ]를 도입하여, 디지털 활용 역량이
탁월한 디지털 금융전문가인 "디지털파트너"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디지털파트너와 함께 경험해 보세요

삼성생명은 보험에 대한 안내, 상담 청약 지급 등에 있어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대면하여 상품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규제 피하고 보자” 기술력 있어도 하드웨어만 ‘만지작’

글로벌 업계 기술 개발 속도내는데 국내선 ‘규제 리스크’ 머뭇 해외로 눈 돌려 원격진료 등 혁신서비스 도전하지만 쉽지 않아 전문가들 “의료법·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 손질해야” 목소리

성장성이 확보됐지만, 규제에 묶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등 나름의 활로를 모색 중이다.

◇ ‘가명 정보’ 사업 실효= 명사적 금지뿐 아니라 모호한 규제 또한 리스크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가명처리를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기자 만난 A 스타트업은 현실적으로 가명 정보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의원 방문 시각이나 질병, 과금 내역 등 금융정보나 위치정보를 결합하면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 향후

기술 수준이 발전하면 언제든 비식별된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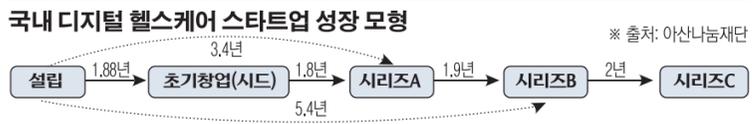
A 스타트업 대표는 “그런데도 비식별화, 가명 정보라는 모호한 뼈대만 세워 놔다”며 “입원진 내부에서도 그냥 밀어붙이자는 의견, 규제에 맞게 맞춰가고 기다리자는 의견이 나와 격렬하게 다투었다. 그래도 워낙 리스크가 크니 순응하지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1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전히 환자 기록을 민감정보로 분류해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이 보건 데이터 활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19·2020년 연간 업종별 벤처투자 비교

	2019년(억 원)	2020년 벤처투자액(억 원)	증감액(억 원)	증감률
화학·소재	1211	1765	554	45.75%
전기·기계·장비	2036	2738	702	34.48%
ICT제조	1493	1869	376	25.18%
바이오·의료	1조1033	1조1970	937	8.49%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 선화·정면돌파 갈림길= 시장은 규제에 묶여 있는데, 창업 및 투자는 이어지는 추세라 경쟁은 치열하다. 그 결과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업종은 제품서비스 일체형 기기나 단품 형태의 완제품에 편중됐다. 규제로 경직된 시장에서 나름의 활로를 찾은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에서 다뤄진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대부분 실증 특례를 받아 심전도 측정기, 휠체어 등의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의료법 규제나 모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크를 지기보다 하드웨어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만성 질환 모니터링, 원격 복약지

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라인 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온라인 진료 서비스 ‘라인 닥터’를 일본 수도권 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작했다. ‘라인 헬스케어 주식회사’는 라인 주식회사와 M3 주식회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다. 영상통화를 이용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진료 서비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충분한 레퍼런스나 인증이 필요하다”며 “행정규제와 이익집단의 압박을 뚫고 이를 쟁취해

(해외로) 나갈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초기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유효시장 확보와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정희 벤처혁신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나라 의료·헬스케어 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출이나 세계 시장 진출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비키기도 했다.

다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규제 샌드박스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산의료재단 소속 연구원은 “결국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합법·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업을 꾸려나가기 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 리스크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본격 사업화에 나서려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제나 수가 등이 엮여 있어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부 차원의 TF를 꾸려서라도 관련 규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규제 풀자” 아우성, 국회는 ‘먼 산’만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0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전보 적용도 해결 과제

원격진료와 혁신 헬스케어 기기 등 ‘의료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 의료법 개정 필요성 원격진료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찬밥’ 신세에 놓였고, 의료기기 관련 업체는 수가 편입이 되지 않아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8일 현재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사-의사’ 간에만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에게 바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이나 원격의료 제한

허용 등을 통해 그나마 숨통을 틔워 주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의료·처방을 허용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진료, 처방이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원격진료를 본 병원이 바로 발송한다. 환자는 처방약을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 또는 대리로 받아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9년 7월에는 강원도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행사 참가자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재난 사고 현장에서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도 실증사업으로 진행했다. 샌드박스(실증특례)는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반면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원격진료를 허용하지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2016년)과 유기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안(2018년)이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두안은 모두 의료법상의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인에서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강

보험 수가를 혁신 헬스케어 기기에 적용해 보급률을 높이면 기술 발전이나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가가 인정된 경우는 없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지능(AI)이나 3D프린팅 등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영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가이드라인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한다.

헬스케어 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가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휴온스

갱년기엔 갱년기유산균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내 안의 나를 깨우다”




판매사 (주)휴온스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소비자 상담실 080-447-4700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갱년기 여성건강과 장건강 동시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 소재**

2021.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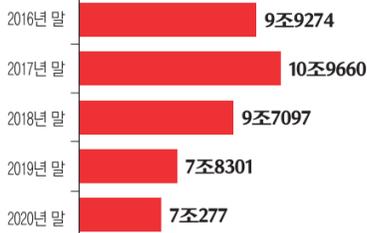
고용기금 3년째 감소세 추경·공자금 배면 '핑크'

〈공공자금관리기금〉

작년말 적립금 8024억 준 7조
 혈세 투입 없었다면 -3.1조 기록
 코로나 재유행 '고용위기' 우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단위 : 억 원) ※출처: 고용노동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대응을 위한 실업급여(구 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폭증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전년에 이어 7조 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약화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기금을 보전해주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대출금)을 투입한 덕인데 이것이 없었다면 적립금은 지난해 이미 바닥이 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보다 8024억 원 줄어든 7조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적립금 규모는 2018년(9조7097억 원·전년 대비 1조2564억 원 감소), 2019년(7조8301억 원·1조8796억 원 감소), 2020년(7조277억 원·8024억 원 감소)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적립금은 매년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고용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에 합친 액수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적립금은 증가하고, 반대가 되면 적립금은 줄어든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쇼크 여파에도 적립금이 전년에 이어 7조 원대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의무 지출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폭증 등으로 적립금이 최대 1조 원 아래로 확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 8507억 원으로 이는 작년 예산(실업급

여 지출 9조5158억 원)보다 2조3349억 원 더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조3000억 원으로 본예산(고용유지지원금 지출 351억 원)보다 2조 2649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본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의 추경 편성을 통해 총 6조2412억 원에 투입했다. 국민 세금으로 기금을 보전해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 고용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4조7000억 원이 기금에 투입됐다. 결과적으로 추경편성을 통한 기금 보전과 공자금 예수금 투입이 적립금 대폭 감소를 막은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지난해 기금 적립금은 -3조1111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기금이 바닥이 났다는 얘기도. 문제는 정부의 기금 보전과 공자금 예수금 투입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있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고개 들면서 지난해와 같은 고용 위기 전철을 밟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시점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상 논의가 이뤄지면 향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기존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경총 회장 찾은 靑 정책실장 이태승(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주식 광풍에 작년 가계빚 '최대'

순자금운용 192.1조원으로 전년보다 100조 가량 늘어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통계작성後 최대폭 감소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의 지출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다. 소득 상위 20%는 지출은 거의 줄지 않았지만, 자동차 구매는 큰 폭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0년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92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순자금운용은 가계가 예금·채권·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으로, 여유 자금으로 통한다. 가계의 연중 처분가능소득은 2019년(92조2000억 원)에 비해 1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민간최종소비지출은 931조7000억 원에서 89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가계순자금운용액 추이

(단위 : 조 원)

※ 가계·비영리단체 기준
 ※ 2019·2020년은 잠정치
 ※ 출처: 한국은행



등으로 소득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 중심 직접 소비가 줄고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이는 1인 가구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로 최대의 감소폭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전년대비 14.6%),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 보건(9.0%) 등은 증가했으나 의

류·신발(-14.5%), 오락·문화(-22.6%), 교육(-22.3%), 음식·숙박(-7.7%) 등에서 크게 줄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저물가 기조에도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대비 4.4% 올랐기 때문이다. 또 음식·숙박이 7.7% 감소한 만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관련해 60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1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소득 1분위 가구의 지출이 105만8000원으로 3.3% 각각 증가한 것도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이 높은 탓이다. 1~4분위 가구는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22.3%, 17.6%, 16.4%, 15.9%로 가장 높다.

5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0.3% 감소에 그쳤고 교통은 18.2%로 급증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비 여력이 있는 5분위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구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26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 피해' 152만명 유예

(7월 26일까지)

연 매출 3억 미만 음식점 등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과 1000만 원 이상 고액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는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예정 고지 제외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6월까지 실적을 7월 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제외 대상은 뺀 나머지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분을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내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각각 88만 명과 16만 명이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해외 법인 중 전자적 용역(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도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를 진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 가량이다.

올해 제공한 서비스부터는 국외 간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처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가스공, 가스냉방으로 '블랙아웃' 방지

전기냉방보다 운영비 저렴...보급률 높여 에너지 편익 증진

한국가스공사는 전력 대체 효과가 탁월한 가스냉방기 보급 사업을 통해 여름철 전력수요 완화에 기여하는 등 에너지 편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가스냉방기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냉방을 하는 기기로, '가스흡수식'과 '엔진구동식(GHP)'으로 나뉜다. 가스흡수식은 가스를 열원으로 냉매(물)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대형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적합하다. 현대자동차가 2015년 울산공장에 가스흡수식 냉방기를 도입했다. 엔진구동식은 냉방을 위한 압축기를 가스엔진을 사용해 구동하며, 학교 등 중·소형 건물의 개별 냉방에 적합하다. 이 기기 하나로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가스냉방기는 여름철엔 냉방 전력수요를, 겨울철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해 최대전력을 완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 또 친환경에

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해 기존 냉방기에 비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크다.

가스냉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계기였다. 여름철 전력 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냉방 에너지원 활용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건물의 총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화했다.

가스냉방의 장점은 전기냉방 대비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탓에 가스냉방기의 보급률은 약 5~10%에 불과한 상태다.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보급률이 약 23%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가스냉방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높여 불시에 발생 가능한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6월에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기 보급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엔진구동식(GHP) 가스냉방기.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확대 내용이 포함돼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냉방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냉방 보급의 큰 장에 요인으로 꼽힌 고가의 초기 투자비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냉방 설치지원단을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우대 지원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가스냉방에 대한 고객 이해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美 “매출 발생국 과세” IMF “연대세” ‘코로나 청구서’ 봇물

“각국, 조세 회피 방지 가능해져”
바이든 국제사회에 당근책 제시
IMF “새로운 세금, 결속력 강화”
기업·개인에 稅 부과 방안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던 세계 각국이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세율을 제한한 미국은 국제 사회 설득을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제안해왔던 ‘디지털세’의 확장판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막대한 소득을 올린 기업과 개인에 ‘연대세’를 물리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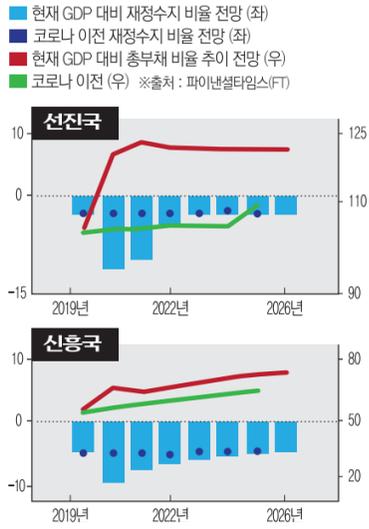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135개국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IT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대기업에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거둔 매출을 기반으로 해당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글로벌 과세 시스템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고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현행 과세 체제를 활용해 세금을 피해왔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세운 후 다른 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자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이 논의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꾸는 한편 과세 대상을 IT 기업을 포함,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로 확장한 것이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지지

선진국과 신흥국의 코로나19 이전과 현재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추이 (단위: %)



를 얻어 내기 위해 ‘디지털세’ 확장판을 역 제안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약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국제 공조 카드를 꺼낸 것이다.

FT는 미국의 새 제안에 대해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며 “100개 대기업에 해당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반기마다 발표하는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막대한 부를 거머쥔 기업과 개인들이 ‘연대세’를 낼 것을 권고했다. IMF는 가장 큰 타격을 본 사람들과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금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공정한 글로벌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올해 중반까지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여서 글로벌 최저세율과 디지털세 확장판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서영 기자 jung2@

‘반도체 품귀’ 法으로 풀겠다는 美

바이든 “양당 원내대표, 공급망 관련 법안 준비 중… 41兆 조달 계획”

미국이 반도체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제조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중국과의 인프라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한 백악관 연설에서 “상원의원들이 반도체에 관한 법안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자동차부터 컴퓨터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부족 문제와 계속 씨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킨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12일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CEO 등 자동차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도 참석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투자·일자리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부족 사태로 올해 차량 판매량이 128만 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GM은 반도체 품귀에 매출이 15억~2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고, 포드는 6월까지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피해액이 10억~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는 물론 가전제품과 항공기 제조 부문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보잉은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위협은 국내 제조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도체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는 바이든 대통령이 2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에 여러 조치를 명했으며, 발의될 법안을 통해 370억 달러(약 41조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인프라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자신이 제시한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양당이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인프라 계획은 항상 미국인들의 열망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해왔다”며 “이제 미국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지금의 인프라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을 중국이 앞서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역시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반도체 없이는 현대 경제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브렉시트 발 북아일랜드 폭력 시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평화의 벽에서 7일(현지시간) 친영국 성향의 연방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충돌한 가운데 폭도들이 불을 지르고 기름을 끼얹고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옛새해 폭력 시위와 충돌이 계속되면서 40명이 넘는 경찰관이 부상했다. 시위대는 버스를 불태우기도 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벨파스트/로이터연합뉴스

20년전 사들인 텐센트 ‘16兆 적팩’

최대주주 내스퍼스 ‘지분 2% 매각’ 막대한 시세차익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소프트뱅크’라 불리는 내스퍼스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텐센트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147억 달러(약 16조 원)를 벌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텐센트의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현금화하는 것이다.

텐센트 최대주주인 내스퍼스는 자회사 프로서스가 보유한 텐센트 지분 약 1억9200만 주를 매도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른 유망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실탄 확보를 위해 매각에 나선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매도 가격은 주당 575~595 홍콩달러 선으로 이는 이날 종가 기준 5.5~8.7% 할인된 가격이다. 아직 매각작업은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해당 물량을 받으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분 매각이 진행되면 내스퍼스의 텐센트 지분율은 30.9%에서 28.9%로 소폭 낮아지지만, 147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향후 3년간 텐센트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스퍼스는 2001년 당시 증시 상장 전인 텐센트 지분의 3분의 1을 34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텐센트는 폭풍 성장을 거듭했는데 특히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 제한과 재택근무 등으로 비디오 게임 등 텐센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급기야 올해 1월 말 텐센트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9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중국 당국의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우려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현재 시총은 7759억 달러에 달한다.

내스퍼스는 2018년 3월에도 주식 매각으로 텐센트 지분율을 33.2%에서 31.2%로 낮추면서 100억 달러 차익을 챙겼다.

텐센트 보유 지분 가치가 급등하면서 자회사의 시총이 모회사 시총을 추월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프로서스의 시총은 약 1811억 달러에 달하지만, 내스퍼스의 시총은 약 1040억 달러다. 현재 내스퍼스는 프로서스 지분 75.2%를 보유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JP모건 회장〉

1년 만에 말 바꾼 다이면 “美 경제 골디락스 진입”

“막대한 재정투입 호재, 호황 2023년까지 지속”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면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경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이면 CEO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65페이지 분량의 연례 서한에서 충분한 저축과 막대한 재정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등이 경기 회복을 이끌면서 미국 경제가 2023년까지 호황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많은 저축, 추가 재난지원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 추가 양적완화(QE), 인프라 투자 계획, 성공적인 백신 접종,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날 무렵의 회열 등에 따라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고 이번

호황은 분명히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완만한 물가 상승이 병존하는 경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골디락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다.

아울러 다이면 CEO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에 대해 “현명하게 지출될 경우 모두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유층 증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아동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참가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부유층 증세에 동의한다”며 “다만 법인세율 인상은 합리적이고 완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기준금리 인상을 야기할 정도의 물가 급등이나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확산은 미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거품과 투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이면 CEO의 이러한 경제 전망은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거의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지난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5% 감소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다이면 CEO는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도 막대한 통화·재정정책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이사장 '직접 제재' 어려워진다

법원, 직무정지 3개월 무효처분
해당 금고에 제재 요구만 가능
지역 내규 따라야...감독권 약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앞으로 금고의 이사장에게 직접 제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민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명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패소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11월 감정업무 부정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새마을금고법에 대한 중앙회와 법원 해석 이견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중략)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적인 제재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다"

법원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대출 등의 사유로 송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지시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반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금고와 금고의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명령하는 문서를 발급해왔다. 해당 문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문구가 담겨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적인 감독 제

재수단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송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접 금고의 임원에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송 이사장 측은 임직원의 제재 규정을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과 검사규정 시행세칙, 표준 정관 등은 금고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 과정상의 실수"라고 맞섰다.

이 사건의 판단은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재규정의 문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아니면 문구 그대로 읽어야 하느냐가 판단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송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고가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못한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권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적인 제재 명령이 무력화되면서 임직원에 대한 처분은 각 금고의 규정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덧붙일 말은 없다"면서 "(감독권 한과 관련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권진산 기자 jinsan@

금융지주 '인터넷銀 추진' 중금리 대출경쟁 신호탄

"시대적 흐름, 비용 절감 효과"
기존 대출, 80% 고신용자 집중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가속화되자 금융지주들은 인터넷은행 설립 준비에 나서면서 중금리 대출 상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에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수요를 물었다. 조사에서 상당수의 지주사가 100% 자본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로부터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싶다는 건의가 오면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으로 기지개를 켜자 시장에서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당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설립이 허가된 이유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들에 중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라고 주문한 상태다. 최근 금융위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가계대출 총량 대비 중금리 대출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안을 담은 중금리 대출 계획서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국이 중금리 대출에 신경 쓰는 만큼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면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하다.

그간 은행들은 저금리 대출에 집중해왔다. 은행연 공시에 따르면 2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자 10명 중 약 8명이 4% 미만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이 90.1%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89.7%), 신한은행(83.5%), 하나은행(81.3%), 국민은행(79.7%)이 뒤를 이었다. 중금리에 해당하는 6%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취급한 비율은 농협은행 1.4%, 우리은행

	금리 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6~7% 미만	8~9% 미만	9~10% 미만
국민은행	79.7	10.2	3.9	1.7	1.9	1.9	0.4
농협은행	89.7	7.3	1.6	0.7	0.2	0.2	0.1
신한은행	83.5	9.2	0.5	4.4	0.3	0.9	1
우리은행	90.1	6.1	2	0.8	0.4	-	0.3
하나은행	81.3	2.6	2.7	4.4	5.6	2	0.8

1.8%, 국민은행 6.2%, 신한은행 6.8%, 하나은행 13.4%였다.

이들 은행이 주로 내준 4% 미만의 대출 금리는 고신용자 몫이었다.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1~4등급의 평균 금리가 4%를 초과하는 곳은 없었다. 다시 말해 4등급 이내에 들지 못하면 대출 금리 4% 미만으로 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1~2등급의 평균 대출금리는 국민은행 2.45%, 신한은행 2.55%, 농협은행 2.57%, 하나은행 2.64%, 우리은행 2.75%였다. 3~4등급

의 평균 금리는 우리은행 2.89%, 하나은행 3.14%, 농협은행 3.25%, 신한은행 3.37%, 국민은행 3.75% 순이었다. 우리은행만 5~6등급의 평균 금리가 3.88%로 3%대였다.

감독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으로 확장하는 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인터넷은행을 열면 중금리 대출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일반 은행보다 적게 드는 자산금리로 같이 연동해서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자녀 계좌 비대면 조회 우리銀 업계 첫 서비스

'WON뱅킹' 앱으로 간편 접속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는 부모 명의의 WON뱅킹을 통해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와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출시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신청 건수가 6500건을 돌파하는 등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2월에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판매를 시작해 구매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WON뱅킹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도규상(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금융조사' 총괄 지휘단 출범

손영재 수석전문관 단장 맡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을 꾸렸다. 총 12명 규모로 단장은 손영재(사진) 수석전문관(행시 42회)이 맡는다.

손 단장은 금융 전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의심 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총괄기획단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



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꾸렸다. 기획단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단은 100명 규모의 '금융대응반'(금융위·FIU, 금감원, 신정원, 은행연 등 구성)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이와 함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감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샌드박스 2년' 금융혁신 서비스 139건 지정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동안 총 13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혁신 금융 사업자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 개선을 결정하면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78건의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며 올 상반기 중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433건) 중 32%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 규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68개의 규제 중 14개의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금융으로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에 진출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와 같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500여 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 분야에서도 신기술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해 기업의 특허 등 기술력의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 제공하는 것,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산원장에 기록해 거래기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금융위는 혁신 금융을 지원 일환으로 핀테크 예산 사업을 통해 테스트 베드 비용, 책임 보험료, 보안 점검 비용 등 기업당 최대 1억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운영해 핀테크 업계,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신한DS, 사이버 보안업체 '엑사비스'와 기술 협력

신한금융그룹 ICT 전문기업 '신한DS'는 엑사비스와 넷아르고스 판매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및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엑사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 시각 해결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맺은 엑사비스의 넷아르고스는 제로데이 침투로 발생하는 보안 시각에 대응하는 세계 최초의 ZDR(Zero-day

intrusion Detection and Response) 보안 솔루션이다.

양사는 △넷아르고스의 총판 및 유지 보수 △넷아르고스 제품의 기능 개선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보안 시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 △디지털전환(DT)을 추진 중인 금융 분야의 보안 시각지대 대응 등을 약속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삼성 '갤A 5형제' 美 상륙... 'LG폰 빈자리' 공략

카메라·프로세서 성능 대폭 향상
갤A32 31만원 등 가격대 낮춰
북미 점유율 확대 라인업 강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A' 시리즈를 대거 출시하며, LG 스마트폰 철수로 생긴 빈자리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갤럭시A42 5G'를 출시했다. 9일에는 갤럭시A52 5G, 갤럭시A32 5G, 갤럭시A12 등 3종을, 29일에는 갤럭시A02s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5종은 모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뛰어나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프로세서 등 성능은 대폭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낮췄다.

갤럭시A52 5G의 경우, 후면에 △6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

갤럭시A 5종 주요 사양

	갤럭시A52	갤럭시A42	갤럭시A32	갤럭시A12	갤럭시A02s
디스플레이	6.5인치 AMOLED	6.6인치 AMOLED	6.4인치 AMOLED	6.5인치 LCD	6.5인치 LCD
후면 카메라 (화소)	6400만(메인), 800만(초광각), 500만(접사), 500만(심도)	4800만(메인), 800만(초광각), 500만(접사), 500만(심도)	6400만(메인), 800만(초광각), 500만(접사), 500만(심도)	4800만(메인), 500만(초광각), 200만(접사), 200만(심도)	1300만(메인), 200만(접사), 200만(심도)
전면 카메라(화소)	3200만	2000만	2000만	800만	500만
배터리(mAh)	4500	5000	5000	5000	5000
램(GB)	4, 6, 8	4	4	3	3
저장용량(GB)	128, 256	128	64	32	32
통신방식	5G	5G	5G	LTE	LTE
가격	500달러	400달러	280달러	180달러	110달러

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나 볼 수 있는 쿼드 카메라를 탑재했다. 그러면서도 500달러(약 56만 원)면 살 수 있다.

갤럭시A32 5G는 280달러(약 31만 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가 최초로 300달러를 넘지 않는 5G(5세대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모델이다. 이밖에 갤럭시A42 5G는 400달러(약 44만 원), 갤럭시A12는 180달러(약 20만 원)다. 가장 저렴한 갤럭시A02s는 110달러(약 12만 원)이다.

또 5G 지원 기기인 갤럭시A42 5G, 갤럭시A52 5G, 갤럭시A32 5G는 충전기와 함께 제공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본 구성품에서 충전기를 제외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갤럭시A 시리즈를 대거 출시하는 건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9% 점유율로 애플(15%)과 화웨이(1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북미 시장에선 25% 점유율로 1위 애플(50%)과 두 배 격차다. 2019년에는 애플이 44%, 삼성전자가 24%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업계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한 LG전자의 북미 지역 점유율(10%)을 삼

성전자가 흡수하기 위해 갤럭시A 라인업 강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한다.

LG전자는 북미에서 프리미엄폰보다는 중저가폰을 위주로 사업을 해왔다. LG전자의 작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의 58%가 150달러 이하 가격대였고, 150~500달러 가격대 스마트폰은 37%였다. 500달러를 넘는 프리미엄폰 스마트폰 비중은 5%에 그쳤다.

국내에서는 LG전자를 대체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없다시피 해 삼성전자가 LG전자 점유율을 그대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에서는 모토로라, 알카텔, 노키아 HMD 등 군소 안드로이드 대체품이 다수 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 관련 리포트에서 "북미에서는 삼성전자가 LG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A 시리즈를 강화하고, 모토로라, HMD, 알카텔, ZTE 등도 나머지 점유율을 뺏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KIA 첫 준대형 세단 'K8' 출격

2.5 가솔린 모델 3279만원부터

기아는 8일 새로운 준대형 세단 K8 온라인 출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K8은 사전예약 첫날에만 1만 8000여 대가 예약됐다.

K8은 기아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로, 디자인 공개 이후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이 이어졌다.

기아는 K8을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I 3가지 엔진으로 출시한다. 직렬 4기통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다음 달 중 선보일 계획이다.

2.5 가솔린은 최고 출력 198마력을 낸다. 리터당 복합연비는 12.0km이다.

3.5 가솔린은 최고출력 300마력을 내며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상시 사륜 시스템인 'AWD'를 더했다. 복합연비는 10.6km다. 3.5 LPI는 최고출력 240마력이다.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복합연비 8.0km를 달성했다. 기아는 K8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전방 충돌



기아의 세단 'K8'이 공식 출시된 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KIA 360 내 차량 음향 시스템 '메리디언(MERIDIAN)' 홍보 코너에 K8이 전시돼 있다. 기아는 이날 온라인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방지 보조(FCA) △지능형 주행 제어(SCC) △내비게이션 기반 지능형 주행 제어(NSCC)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다.

가격은 2.5 가솔린 기준 △노블레스 라이트 3279만 원 △노블레스 3510만

원 △시그니처 3868만 원이다. 3.5 가솔린은 △노블레스 라이트 3618만 원 △노블레스 3848만 원 △시그니처 4177만 원 △플래티넘 4526만 원이다. 3.5 LPI 모델은 △프레스티지 3220만 원 △노블레스 3659만 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교통안전공 "전기차 활성화 위해 가정까지 배터리 활용도 넓혀야"

“운행방식 등 빅데이터 구축
배터리 화재 사전 예방해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심야전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구동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력을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에 전기차 시대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위험도 예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먼저 현재 운행 중인 전체 전기차에서 배터리 정보를 수집,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충전 때 배터리 온도변화, 운행방식 등의 자료를 확보하면 사전에 화재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럴 때 과충전 방지 시스템 가동 및 서비스 점검 명령 등을 내리면 된다. 박 본부장은 "배터리 모니터링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효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폰 OS 업데이트 최대 3년 동안 지원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LG전자가 휴대폰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 기간을 기존 프리미엄 모델 2년, 일부 보급형 모델 1년에서 각 1년씩 추가해 프리미엄 모델 3년, 일부 보급형 모델 2년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시한 LG 벨벳과 LG 윈의 경우 2023년까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대상 모델은 2019년 이후 출시된 제품 가운데 프리미엄 및 일부 보급형 모델부터 적용되며, 국가별 LG전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지원은 구글의 OS 배포 일정, 제품 성능, 제품 안정화 수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LG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전국 120여 개 서비스센터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포스코 'ESG 경영' 실천 본격화

올해 첫 기업시민 자문회의 개최

포스코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8일 CEO 자문기구인 '기업시민 자문회의'의 2021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시민 자문회의는 2019년 신설해 운영해 온 기업시민위원회에 안전·환경·조직문화 분야 전문가 3명을 보강하여 ESG에 대한 전략 지문을 한층 강화한 CEO 자문기구이다.

포스코는 2월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기업시민 자문회의 확대 개편을 통해 ESG 경영의 본격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했다. 기업시민 자문회의 위원으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수근 기업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인 장세진 위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인 김인회 위원 이외에도 3명의 외부 전

문가가 신규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안전분야 전문가로는 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및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등을 역임한 문기섭 전(前)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 환경분야 전문가로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분과위원장과 환경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김종대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조직문화 전문가로는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유규창 한양대 경영대학 학장이 새롭게 참여했다.

기업시민 자문회의 위원과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1년 첫 회의에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업시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2020 기업시민 보고서 발간 계획을 공유하고, 포스코 안전실행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포스코는 향후 분기마다 기업시민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시민 실천성과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한 전략 자문과 함께 ESG 경영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HMM, 미주 서안노선 임시선박 3척 추가 투입

HMM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박 3척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HMM은 그동안 미주 서안(부산~LA)과 동안(부산~서버니), 유럽, 러시아, 베트남 등 총 17항차에 걸쳐 임시선박을 투입해 왔다.

이번 3척은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선박 애로를 겪고 있는 노선인 미주 서안에 모두 투입된다.

가장 먼저 출항한 6800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HMM 상하이호'는 5868TEU의 화물을 싣고 7일 부산항에서 출항했다. 전체 화물 중 약 50% 이상이 국내 중견·중소 화주의 물량으로 선적됐으며, 이달 19일 LA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63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오클랜드호'가 19일 출항, 이달 30일 LA항에 도착 예정이며, 5000TEU급 'HMM 프레스티지호'는 다음 달 1일 부산항을 출발, 5월 12일 LA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한화큐셀, 태양광 점유율 1위

한화큐셀은 2020년 미국 주거·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 우드맥킨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2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3년 연속 1위다.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도 전년보다 5%포인트가량 상승한 19.1%의 점유율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한화큐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품질 검사 기준보다 최대 3배 혹독한 조건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GS, 바이오 스타트업과 신사업 발굴 '상생 협력'

'더 지에스 챌린지' 6개사 선발 멘토링 등 사업모델 구체화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시너지"



생활, 깨끗한 환경, 건강한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1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85개사가 응모해 14대 1의 경쟁을 뚫고 6개사가 최종 선발됐다.

GS는 8일 강남구 GS타워에서 '더 지에스 챌린지' (The GS Challenge)에 선발된 바이오테크(BT) 스타트업 6개사와 '스타트업 캠프(Start-up Camp)'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에는 홍순기(사진) GS 사장과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6개사의 CEO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더 지에스 챌린지'는 친환경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바이오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 소재 생산 및 활용 △폐기물, 오염물질 저감, 차단·정화 및 재활용 △질병 진단, 건강관리 제품 및 솔루션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는 '바이오 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새로운 생활 분야에서 3개사, 깨끗한 환경 분야에서 1개사 그리고 건강한 미래 분야에서 2개사가 선정됐다.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대체육과 단백질 제조를 제안한 '마이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항공 방제용 친환경 방제제를 제안한 '젠 153바이오텍'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소재 '친환경 석세포'를 제안한 '루츠랩' △근종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제안한 '뉴트리인더스트리' △대사공학 기반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제안한 '뉴티스바이오' △세포음집체 및 세포외소포 바이오 생산기술을 제안한 '스페라이오' 등이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GS 각 계열사의 선진화된 생산설비와 연구소 인프라 등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구체화할 예

정이다.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스케일업(scale-up)도 추진한다. GS그룹의 계열사들은 초기 육성·사업화 추진 등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바이오산업·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8월 말로 예정된 '데모 데이'에서는 6개사가 추진해온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내용을 국내외 투자자와 GS그룹 관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캠프에 참가한 스타트업 CEO들은 "바이오테크 사업의 구체화와 대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인 친환경 바이오테크 사업의 제품 고도화와 사업성 검증 등의 과정에서 GS그룹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순기 사장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모두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듯이 앞으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응원한다"며 "GS는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VC)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상생(win-win)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롯데케미칼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착수

여수 1공장에 실증 설비 설치

롯데케미칼이 8일 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실증 설비를 여수 1공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화학사 최초로 기체 분리막을 사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중순 여수 1공장에 설치돼 실증에 들어간 기체 분리막 활용 기술은 국내 다른 업종에서 운송·판매 등 사업성이 부족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롯데케미칼은 1년 동안 여수 실증 설비 운영을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 질소산화물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3년 상용화 설비를 완공할 계획이다.

설비가 완공되면 이산화탄소를 연 6만 톤 이상 추가 포집한 후 순도를 높



여수 1공장 CCUS(탄소 포집·활용) 실증설비 제어실(왼쪽)과 전처리, 분리 설비.

여 자체 생산 증인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한다. 또 드라이아이스와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으로 제조해 인근 중소화학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대산공장과 울산공장으로 관련 설비를 확대해 연간 2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김대영 기자 kdy@



중고 갤럭시폰, 디지털 검안기로 재탄생

삼성전자가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검안기'를 확대 보급하며, 글로벌 '눈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검안기를 베트남에 이어 올해 인도, 모로코, 파푸아뉴기니 등 4개 국가로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업사이클링'의 일환으로 국제실명예방기구(IAPB), 연세의료원과 협력해 '디지털 검안기'를 개발했다. 이 기기는 실명 유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안저(동공으로 안구 안쪽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부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디자인 철학·미래 방향성 한 눈에...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오픈

글로벌 여섯 번째 개관

현대자동차는 부산 수영구에 상징적인 디자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을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고양, 하남, 베이징, 모스크바에 이어서 운영되는 여섯 번째 현대모터스튜디오로, 지상 4층 연면적 2396.6㎡(약 758평) 규모다.

현대모터스튜디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은 수도권에만 집중된 디자인 관련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위치한 F1963은 고려제강의 옛 철강공장 부지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된 이후 부산의 상징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됐다.

스튜디오는 F1963이 철강 공장이었던 점에 착안해 와이어와 철골을 핵심 소재로 활용했다. 건축물 설계는 '원소원 아키텍츠'의 최우 소장이 총괄했다.

1층은 필로티 형태의 공간으로 LED 크리에이티브 월이 설치돼 연중 진행되는 디지털 미디어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2층에 있는 전시공간에서는 현대자동차

만의 디자인 철학과 미래 지향성을 반영한 전시, 3층은 추가적인 전시 공간과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있다. 4층은 러닝존, 키친 등으로 운영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은 공식 개관 기념으로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첫 번째 디자인 전시 프로그램인 '리플렉션 인 모션(REFLECTION IN MOTION)'을 선보인다. 색상, 물질, 형태, 빛, 그림자 등의 핵심 요소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콘셉트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모터스튜디오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비전과 방향성이 반영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이 다방면으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이라며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창의성에 주목하는 많은 고객에게 디자인이 만들어가는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개관을 시작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기획력을 갖춘 디자인 큐레이터들을 발굴해 양성하는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어워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노우리 기자 we1228@

희생중소기업 사장님 -
절망은 NO
희망은 ON!

정부, 희생법원, 캠코가
온 힘을 모아 재기를 돕겠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정책지원
 희생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희생법원의 신속한 희생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희생절차(S-track),
 사전희생계획제도(P-plan)

캠코의 촘촘한 재기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투자매칭,
 자산매입 후 임대(S&LB), 신규자금지원(DIP금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1588-3570
 온기업 www.oncor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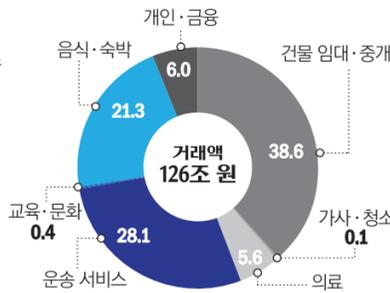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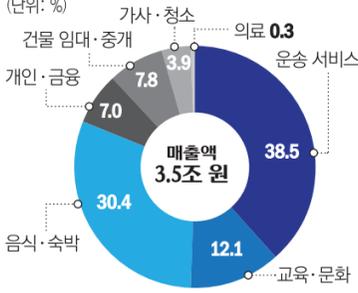
서울희생법원 | 금융위원회 |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to 오프라인〉

코로나·비대면이 키운 'O2O' 작년 거래액 126조

상품 배송·음식배달 수요 급증
O2O 서비스 기업 123개 늘어
운송 거래 35조, 총 매출 3.5조
공급자-플랫폼-이용자 선순환

O2O서비스 거래액 및 매출액(추정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이 급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O2O 거래액은 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6% 늘었고, 특히 음식배달 거래액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합 서비스(O2O 서비스) 매출·인력 현황, 플랫폼 거래 규모 등을 조사한 '2020년 O2O 서비스 산업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O2O 서비스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음식 주문, 택시·렌터카 호출, 숙박·레저 예약, 부동산 계약, 가사도우미 요청 등을 언

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급자와 이용자 간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돼 생활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의 정확한 산업 통계를 제공하고자 2018년 시범조사를 거쳐 2019년부터 산업조사를 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조사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인정받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했다. 이번

조사에는 스타트업 협·단체 회원사, 앱스토어, 기업정보 종합포털 등에서 O2O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7개 분야로 분류해 조사했다.

지난해 O2O 서비스 기업은 총 678개로 전년 대비 123개 증가했다. 이중 서비스 분야별로는 오락·스포츠·문화 및 교육 분야의 기업 수가 189개로 가장 많았고, 운송 서비스(153개), 개인 미용·금융 및 보험·기타(127개), 음식점 및 숙박(80개)

등 순이다.

O2O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뤄진 총 거래액(플랫폼에 등록된 제휴사 및 가맹점의 매출)은 약 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6% 성장했다. 거래액이 대폭 상승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품배송·음식배달 수요 급증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차·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이 속한 운송 서비스 분야의 거래액이 약 3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O2O 서비스 기업의 총매출액은 약 3.5조 원으로, 전년(약 2.97조 원) 대비 18.3% 성장했다. 매출 발생 형태는 수수료, 광고료, 이용료, 정기사용료, 가입비 등이다. 서비스 분야별 매출액은 운송 서비스가 1.3조 원(38.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점 및 숙박(30.4%), 오락·스포츠·문화 및 교육(12.1%), 건물 임대·중개 및 유지보수(7.8%) 등 순이다. 매출 발생 형태별로는 수수료의 비중이 대폭 증가

(31.2→52.7%)하고 광고비중이 크게 감소(25.6→7.3%)했는데, 지난해음식배달 기업들이 광고 매출에서 수수료 매출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킨 영향이 데이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O2O 플랫폼에 입점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휴·가맹점은 약 53.3만 개(55.6% 증가), O2O 서비스 종사자는 약 58만 명(8.1% 증가)으로 추정돼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하는 외부 서비스 인력은 약 5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96.8%를 차지하고, 기업 내부 고용 인력은 약 1.8만 명(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의 증가와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 공급자·플랫폼 기업·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건실한 O2O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문과생도 SW 개발, 수료생 네이버·카카오 입사”

인터뷰

김인기 코드스테이츠 대표

수강생 86% 컴퓨터공학 비전공
호갱노노 등 180여 기업과 제휴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IT 부트캠프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를 만났다.

8일 이투데이와 만난 김인기(사진) 코드스테이츠 대표는 “인턴, 신입, 경력 할 것 없이 개발 인재를 부족하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다”라며 “기업 대표들이 찾아와 개발자를 ‘모셔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용역문화에서 최근 개발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근 20년을 ‘문과생’으로 살았다.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문화관광콘텐츠학과를 다니던 중 개발에 뜻을 두고 중퇴했다.

그는 “인턴 도중 학교 주변 매장을 돌아볼 일이 있었다”라며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권유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코딩 부트캠프 ‘핵 리액터

(Hack Reactor)’를 수료한 경험이 코드스테이츠 창업 밑거름이 됐다.

과외·학원·인터넷 강의에 머물러가보다 실제 현장과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 해당 모델을 이식하고자 당시 미국에 있던 한국계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을 돌렸다.

김 대표는 “아이디어와 메일 한 통만 가지고 투자자들,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라며 “개발자와 오롯이 경쟁하기보다, 비즈니스와 개발을 융합해 차별점을 가져가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소위 ‘개발 머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엄청난 기술적 성공을 거두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며 “개발자가 꼭 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영역을

확장하는 무기를 갖출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코드스테이츠의 수강생 중 컴퓨터공학 비전공자 비율은 86%에 달한다.

코드스테이츠와 취업 연계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IT기업은 약 180여 개다. 호갱노노, 클래스101, 아이디어스, 늬, 프리, 산타토익(위이드), 다노, 숨고 등이다. 2020년 기준 코드스테이츠 수료생들은 취업률은 90%를, 파트너사의 코드스테이츠 출신 재채용률은 50%를 넘는다. 대졸이상 취업률 67%를 상회하는 수치다. 수료생들이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쿠팡, 우아한형제들, 왓차 등에 입사하기도 했다. SW엔지니어링,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구매 촉진(그로스 마케팅), 프로젝트매니저(PM)에 관련한 교육 과정을 제공 중이다.

단순 취업률이 아닌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미국 체류 시절 안고 있던 학비 고민을 ‘위·원모델’ 설계에 보탤다. 교육 과정 기간 동안 비용 지불 없이 수강생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면 연봉의 일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첫 도입 이후 총 3500여 명이 교육 기회를 얻었다.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심도 드러냈다. 코드스테이츠가 소프트웨어·미래산업 교육을 통해 2030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소은 기자 gogumee@

SK브로드밴드 ‘채널S’ 개국 독점 콘텐츠 편성 비율 70%

동네 공익 콘텐츠 제작·방영
카카오엔터·SKT 등과 협력

미디어에스(주)의 종합엔터테인먼트 채널 ‘채널S’와 지역 전문 채널 ‘채널S 동네방네’가 8일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1월 설립한 MPP(복수채널 사용 사업자) 자회사 미디어에스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채널S는 남녀노소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NO. 1 채널을 목표로 내걸었다. 채널S 동네방네는 우수한 지역 공익 콘텐츠를 발굴하고, 자체 제작해 방영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 콘텐츠 전문 채널이다. 채널명 ‘S’에는 Supreme(최고의 채널), Spectrum(스펙트럼이 남다른 채널), Super(멋진 감동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채널)의 의미를 담았다.

채널S는 전체 프로그램 중 70%를 다른 TV 채널에선 볼 수 없는 독점 콘텐츠로 편성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시청률 중심의 안정적인 재방송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도전을 택한 셈이다.

미디어에스는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했다. 우선 파트너십 및 투자를 통한 독점 콘텐츠 발굴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

을 맺고,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를 채널S에서 방영한다. 1조 콘텐츠 투자를 선언한 웨이브(wavve), SK텔레콤과도 협력을 맺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은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이다. 미디어에스만의 색깔로 고객에게 의미 있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SM C&C와 손잡고 기존 예능과는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상생을 위해 전문성 있는 중소 PP와 공동제작도 기획 중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시장 파이를 키우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채널S 개국 첫날부터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가 방영된다. 8일엔 MC 강호동과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잡동산’, 9일엔 MC 신동엽을 앞세운 ‘신과 함께’가 첫 선을 보인다. 모두 SM C&C와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채널S, 채널S 동네방네 출범으로 콘텐츠·채널·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사업의 가치 사슬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김혁 미디어에스 대표(SK브로드밴드 미디어전략본부장)는 “실시간 방송 채널과 B tv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의 유통 창구를 넓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쌍용C&E, 강원 영월에 친환경 매립장 조성

1700억 투입... 순익 40% 환원

쌍용C&E가 강원도 영월군에 친환경 매립장 조성을 추진한다. 관련 수익금 4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매립장 건립과 운영, 폐기물 수송 등에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쌍용C&E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에 있는 영월공장 석회석 폐광산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9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쌍용C&E는 총 17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매립장 조성 토목공사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인 후 3년에 걸쳐 진행된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 수송 등에 지역 인재와 지역 업체를 우선 채용·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극대화한다.

또한, 건립 이후에는 순이익의 약 40%를 지역발전·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과 영월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고, 요양병원 설립 용지의 기부채납 및 설립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매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쌍용C&E는 최근 제기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에 관해서는 강화한 대책을 수립해 환경 영향을 미리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완벽한 4단계의 차수 시설 구축과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바닥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조성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인 4단계 차수 시설을 구축하고, 발생한 침출수는 고도 처리공정을 통한 정화를 거쳐 인근에 있는 영월공장에서 공장용수로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내주부터 ‘알뜰폰 스케어’서 휴대폰 즉시 개통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MVNO협회)가 알뜰폰 스케어 현장에서 개통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12일부터 유심 제공과 함께 개통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케어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대문구에 문을 열었다.

협회는 “알뜰폰 스케어를 방문하는 이용자 중 즉시 개통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었다”며 “알뜰폰 스케어에 참여하는 사업자로부터 유심을 받아 개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이 같은 개통 서비스는 단말기를 다루는데 서툴거나 개통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스케어 참여사는 13개사다. 이 중 셀프 개통은 국민은행,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SK텔레콤, 큰사람, 인스코비, 프리텔레콤 7개사에서 시행한다. KCT(한국계이탈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세종텔레콤, 위너스텔,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6개사는 해피콜 개통을 제공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이익을 넘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곳과 손잡다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고
 탄소를 줄이는 회사들과 손잡으며
 내일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신한이 금융에 ESG를 더합니다.

Hope Together.
 Grow Together.



신한 ESG 바로 쓰기 #2

신한금융그룹 ESG	친환경 금융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제로사회 만들기	포용 금융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한 금융 약자 지원
	혁신 금융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스타트업 지원	희망 금융 다름이 존중 받는 세상을 위한 사회 다양성 추구

빨리 온 더위에 유통가 여름 마케팅 '핫하네'

CJ오쇼핑, 린넨 원피스 출시
롯데홈쇼핑, 에어컨 판매 시작
CU, 캔맥주 구독 서비스 론칭

이번주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유통업계의 여름 시즌 준비가 한창이다. 업계는 이른 더위에 예년보다 2주일 이상 빠르게 여름 신상품을 내놓고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홈쇼핑업계다. 홈쇼핑은 본격적인 시즌에 앞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패션의 경우 통상 한 시즌 앞서 상품을 기획해 선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이른 더위에 예년보

다 2주가량 빠르게 여름 패션 상품을 내놨다. CJ오쇼핑은 시원한 청량감과 통기성으로 여름을 대표하는 소재인 린넨을 앞세워 티셔츠, 원피스, 스커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 패션 상품을 선보인다.

우수한 소재를 강점으로 하는 '셀럽샵 에디션 (Celebshop)'에서는 프렌치 린넨을 앞세워 올여름을 공략한다. 린넨 중에서도 고급소재로 알려진 프렌치 린넨 100%로 이뤄진 자켓, 니트와 블라우스 등을 선보인다.

배우 한예슬을 모델로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보여 온 '더엣지(The AtG)'는 올여름 베이직하지만 노랑, 파랑, 보라 등 화려한 색감의 패션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했다. 색색뿐 아니라 셔링, 레이스, 퍼프 소매 등 디자인 변화를 통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프랑스 로맨틱 브랜드 '까



캔맥주 구독 서비스 론칭한 CU.

사할'도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아트웍 티셔츠, 고급 라미 100% 소재에 소매 볼륨과 허리라인을 강조한 여성스러운 여름 재킷 등을 내놓는다.

롯데홈쇼핑 역시 역대 가장 따뜻한 초봄 날씨에 맞춰 여름 상품을 예정보다 2주가량 빨리 선보였다. 패션 부문에선 지난달 16일부터 '베스트 패션위크(BEST FASHION WEEK)' 특집전을 통해 '라우렐', '조르주레쉬' 등 단독 패션 브랜드의 초여름 상품을 조기 론칭했다.<사진>

더워진 날씨 탓에 여름 패션 상품은 벌써부터 '핫'하다. 2일엔 롯데홈쇼핑 히트 상품 1위를 매년 차지해온 단독 패션 브랜드 '라우렐'의 여름 신상품 '코튼100 포인텔 가디건 3종'을 선보여 7000여 세트를

팔았다.

4일에는 지난해 8월 론칭한 프랑스 컨템포러리 브랜드 '폴앤조'의 '메탈 프린트 티어드 원피스 세트' 등을 출시해 당일 방송에서만 약 2만 세트를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계절 가전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내놨다. 10일 대표 리빙 프로그램 '최유라쇼'를 통해 LG전자의 에어컨 신상품을 선보인다. 인테리어 가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LG 오브제컬렉션 휘센타워를 판매한다.

롯데홈쇼핑은 이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캐리어' 등 유명 가전 브랜드의 에어컨 판매 방송을 시작하고, '음식물 처리기', '제습기' 등의 계절 가전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집앞 편의점의 여름 준비도 한창이다. 편의점은 컵얼음과 시원한 맥주 등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먹거리 세팅에 주력하고 있다.

CU는 지난달 밴티 사이즈 컵얼음과 델라페(delaffe) 아이스드링크를 출시했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밴티 사이즈 컵얼음은 기존 대용량 컵얼음인 '빅컵얼음(230g)'보다 두 배 가량 커진 400g 용량의

상품이다. 이에 따라 함께 출시되는 델라페도 기존 대용량 아이스드링크 용량인 335ml보다 1.5배 늘어난 500ml로 기획했다.

CU는 "델라페 외에도 음료를 시원하게 즐기려는 목적으로 빅컵얼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밴티 사이즈 컵얼음을 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CU는 맥주 성수기를 앞두고 업계 최초로 캔맥주 구독 서비스도 론칭했다. CU가 주류 멤버십스타트업인 데일리샷과 선보인 '캔맥주 구독 서비스'는 데일리샷 앱에서 구독권을 구매하면 매월 캔맥주 3캔을 CU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구독료는 6900원이다. 편의점 대표 행사인 맥주 '4캔 1만 원' 행사와 비교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주류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다. 세븐일레븐에선 소주와 맥주를 싸게 판다. 소주 3종 맥주 7종 상품을 농협카드 결제 시 10% 현장 할인 판매한다. 와인 7종 역시 롯데카드 결제 시 10% 할인된 가격에 현장 판매한다.

이마트24에선 '5개 1만 원' 행사 맥주를 BC카드나 페이북으로 결제 시 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최저가 아니면 보상” 다시 ‘전쟁’

쿠팡, 로켓배송 무조건 무료
이마트, 공산품 최저가 보상
GS프레시몰 '채소 초저가몰'

미국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쿠팡이 가격에 상관없이 무료 배송 서비스에 나서며 전국 석권 전략에 돌입하자 이마트는 쿠팡의 주력상품인 공산품에 대해 최저가 보상 전략으로 맞불을 냈다.

편의점 CU와 GS리테일의 GS프레시몰도 채소 등 신선식품을 대형마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전면 승부를 예고한 상태다. 이커머스끼리, 또는 대형마트 간에 벌어졌던 출혈 경쟁이 쿠팡 상장을 계기로 유통업계 전반으로 불붙고 있다.

◇이마트, 공산품 최저가 보상 선언 =이마트는 이마트앱 전면 개편과 함께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비교 대상은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로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과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2일부터 익일 배송인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 유료 멤버십인 '로켓와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문 개수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료 배송하는 행사에 나서자 이마트가 최저 가격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한다.

이마트의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은 쿠팡이 주력으로 삼는 가공 생활용품이다. 대표 상품은 '농심 새우강 400g'과 '오리온초코파이 702g(18입)', '농심산라면(120g×5)', 'CJ 핫판(210g×3)', '서울유우(1l)',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4입(240ml×4)', '코카콜라(1.8l)' 등이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전용 쇼핑 포인트인 'e머니'로 적립해 준다.

◇편의점·온라인몰은 채소 최저가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최저가 신선식품으로 대형마트를 겨냥한다. 신선식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의 대표적인 전략 상품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몰 GS프레시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었던 '채소 초저가몰'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물가 민감도가 가장 높은 채소 50여 종을 선정하고, 주요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유사 상품 가격을 모니터링해 매일 2회 가격 정책을 조율해 저가를 유지한다.

편의점 CU도 신규 채소 상품을 도입하고 30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선다.

◇'살아남자' 업체불문 출혈 경쟁 =과거 최저가 전쟁은 주로 온라인 업체나 대형마트 업계에서 나타났다. 치킨 게임을 벌이던 위메프나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핫딜'이나 '타임딜' 등으로 저가 경쟁에 나섰고,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 업계가 20년 전부터 이른바 '10원 전쟁'에 나서며 경쟁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유통업계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이커머스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편의점도 배달을 나서고,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성장에 따라 사실상 업체간의 구분이 허물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쿠팡을, 편의점들은 대형마트를 겨냥하는 등 물고 물리는 경쟁을 통해 일단 살아남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제철 맛은 '순창 참두릅'

롯데마트는 창립 23주년을 기념하고 제철 채소 판매 활성화를 위해 14일까지 '순창 GAP 참두릅'을 7980원(1팩)에 전국 전점에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 순창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 참두릅 최적의 재배조건을 가지고 있어 국내 참두릅 생산량 1등 산지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3가지 맛 골라 드세요” 풀무원, 비빔면시장 도전장

‘정·백·홍 비빔면’ 출시

풀무원이 '정·백·홍 비빔면'으로 비빔면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풀무원식품은 여름철 계절면 성수기를 앞두고 신개념 로스팅 공법으로 만든 맛있는 비빔면 3종 '자연은맛있다 정·백·홍 비빔면'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여름면 시장은 연간 1400억 원대(닐슨 데이터 기준)로 쫄면, 냉면, 메밀소바 등은 모두 감소한 반면 '비빔면'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정·백·홍 비빔면'은 지난해 8월 말 정·백·홍면을 출시한 이래 약 7개월 만에 선보이는 라면 신제품이자 '자연은맛있다'의 첫 비빔면이다.

풀무원은 여름철 대세인 비빔면을 출시



하되 그동안 없던 콘셉트로 차별성을 강조한 비빔면을 기획했다. 정·백·홍 비빔면은 로스팅을 거쳐 진하고 또렷한 끝맛을 내는 새로운 비빔면 시리즈다.

정·백·홍 비빔면은 각 제품이 3색의 강한 개성을 지닌다. 풀무원은 다양한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채식 지향인,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매운맛을 선호하는 젊은 층으로 세분화했다.

다른 재료를 추가로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 비빔면 특성을 반영해 비빔장 중량 정비

비빔면 50g, 홍비빔면 55g으로 기존 비빔면 제품들(30~38g)보다 넉넉하게 담았다.

'정비빔면'은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빔면으로, 한국비건인증원의 검증을 마친 최초의 라면인 '정면'의 연장선상이다. 마찬가지로 '백비빔면'은 고소한 감칠맛이 뛰어난 매실간장 비빔면으로 빨간색 비빔장이 주도하는 비빔면 시장의 흐름을 바꿀 법치 않은 하얀색 비빔면이다. '홍비빔면'은 강렬한 매운맛이 특징인 하늘초 물비빔면이다.

풀무원식품 자맛 사업부 권순원 PM(Product Manager)은 "비빔면 시장에서 정·백·홍 비빔면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개성을 담아낸 비빔면이다. 취향에 따라 정·백·홍 비빔면을 즐기며 새로운 여름의 맛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농심 '배홍동' 한 달 새 700만개 비뻐다

농심이 야심차게 선보인 '배홍동 비빔면'이 출시 약 한 달 만에 700만 개가 팔려 나갔다고 8일 밝혔다.

배홍동 비빔면은 농심이 지난 11일 출시한 제품으로, 출시 초반부터 대형마트 등 전 유통점에서 추가공급 요청이 쇄도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

로 인기몰이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농심은 고속라인에서 배홍동비빔면을 생산하며, 공급량을 출시 초기 대비 2배가량 늘려 수요에 발맞추고 있다. 향후 생산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원재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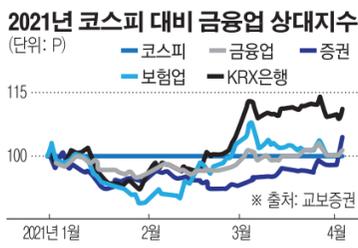


농심 관계자는 "기존 비빔면과 차별화되는 매콤새콤한 비빔장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비빔면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영업, 마케팅활동을 펼쳐 비빔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실적 기대” 外人 ‘금융주 사랑’

‘금리상승’ 실적 모멘텀 부각
1분기 코스피서 8.6조 팔 때
은행주 오히려 1.8조 순매수



조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지주의 주가가 1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금리 상승 전망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 역시 실적 모멘텀 부각을 내세우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27.56% 올랐고, 우리금융지주(20.45%), 기업은행(16.98%), KB금융(31.07%) 등도 모두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률을 앞서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 변동률은 5.61%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승세는 배당 등 각종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블루웨이브 현실화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큰폭 상승한데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주를 대규모 순매수하기 시

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달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을 478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를 1611억 원 사들였다. 우리금융지주(529억 원), 기업은행(952억 원) 역시 순매수세를 기록 중이다. 1분기만 놓고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8조 6000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은행주는 1조 80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선택한 배경으로는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1분기 실적 개선이 꼽힌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은행(KB·신한·우리·하나·DGB·BNK·JB금융)의 추정 순이익은 4조40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3조9890억 원)를 크게 상회

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진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숏스르기 국면 진입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에도 금리 모멘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닝 시즌을 전후해 실적 모멘텀도 크게 부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주 주가 전망은 아직도 밝고, 멀티플(Multiple) 감안시 투자 매력 또한 여전히 높은 만큼 주가 조정시 이를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금융지주들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 역시 우세하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주와 금리의 상관관계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금리는 은행 핵심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리는 당분간 점진적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NIM(순이자마진)의 반등과 대출평잔의 증가로 핵심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6월 이후 자율적 배당정책으로 회귀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인데 얼마 전 신한지주는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옵티머스 투자 원금 전액 환급’ 결정에 전문사모운용사 “문 닫으란 얘기”

전문사모운용사들이 생존갈림길에 섰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고객의 투자 원금 100%를 돌려주라”고 결정하면서 불똥이 튀고 있어서다. 판매사나 수탁사들이 전문사모운용사와의 계약을 꺼리고 있다.

8일 한 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판매사에 100% 원금 배상을 결정할 것을 두고 중소형 전문사모운용사는 모두 문 닫으라는 신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미 수탁사, 판매사에서 사모펀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펀드를 만들고 판매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 자본시장에 나타날 후폭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증권사 CEO 징계까지 봐야 하니 증권사에서 ‘알아서 배상하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며, 조정안만 빠르게 내려야 할 것 같다”라고도 꼬집었다.

전문사모운용사들이 궁지에 몰린 것은 금감원이 판단 근거로 내세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때문이다. 통상 전문사모운용사에서 사모펀드를 설정하면, 판매사에 상품 설명서를 전달하고 고객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가 ‘거절’을 기본 입장으로

두면서, 대다수 전문사모운용사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판매사도 기준 없이 금융당국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국내 증권사 A임원은 “판매사도 펀드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우선 리스트를 올리면 상부에서 ‘지금은 보유하자’고 회신이 온다”며 “사모펀드 중 비상장 주식을 담으면 아예 받지 않고, 공모주 펀드 정도만 맡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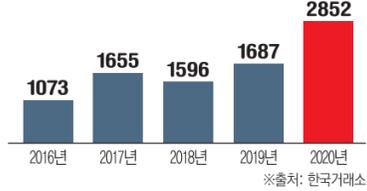
2019년 독일국제연계 파생상품(DLF),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이 줄줄이 터지며 사모펀드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102조 원까지 규모를 키웠다가 지난해 58조 원을 기록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선제적인 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에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인아 기자 ljh@

한국거래소, 역대급 실적에 ‘통 큰 배당’

당기순익 전년 대비 69% ↑ ... 증시 활황에 수입 증가
주당 배당금 29.3% 늘리며 배당 총액 500억 원 육박

한국거래소 순이익 추이
(단위: 억 원) * 연결기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70% 가까이 뛰자 ‘통 큰’ 배당에도 나섰다. 자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도 줄줄이 호실적을 달성했다.

8일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연결 기준)의 당기순이익은 2852억9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뛴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기준 순이익은 약 1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한시적 수수료 면제에도 살아 올린 역대급 실적이다.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거래소는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 바가 있다. 증시 활황에 주식 거래와 신규 상장 등이 늘어나면서 각종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결과다.

실제 거래 및 청산결과 수수료는 2019년 2700억 원에서 2020년 3714억 원으로

3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로세스이용료는 271억 원에서 305억 원, 상장 수수료는 147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1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순매수 규모도 역대 최대(47조 4902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작년 코스피 지수는 전년 말 대비 30.8% 오른 2873.47에서 막을 내렸다. 시총도 1476조 원에서 1981조 원으로 불어났다.

또한, 신규상장 기업 수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공모금액은 큰 폭으로 뛰기도 했다. 전년 대비 신규상장 기업 수는 1사 줄었지만, SK바이오팜, 빅히트 등 ‘IPO 대어’들의 출격으로 공모 규모는 135.7% 증가했다.

증시 활황에 자회사들도 줄줄이 호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예탁원의 순이익은 978억 원으로 전년(489억 원)보다 9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콤 순이익은 383억 원으로 전년(267억 원)보다

43.2% 늘었다. 지난해 코스콤이 인수한 코스콤펀드서비스만 순손실(3억6536만 원)을 냈다.

아울러 거래소는 호실적에 배당 규모도 늘렸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 2011원에서 2601원으로 29.3% 뛰었다.

이에 배당총액은 497억 원으로 전년(384억 원) 대비 100억 원 넘게 늘었다. 작년 말 기준 거래소의 주주는 KB증권을 포함한 30개 금융투자업자(86.11%)와 한국증권금융(4.12%), 중소기업진흥공단(3.03%), 한국금융투자협회(2.05%)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 활황에 따른 수수료 이익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며 “주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배당을 늘렸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탄소배출권 자산·부채 커지는데 공시는 미흡

30곳 중 6곳만 주석사항 충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배출권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은 작년 말 기준 5237억 원, 배출부채는 70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보다 각각 142.1%, 7.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

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한다.

현재 기업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돼 있어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1차 전량무상→2차(2018년~2020년) 3%→3차(2021~2025년) 10%’ 확대됨에 따라 배출권 자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

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배출권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량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570만 톤이었던 배출권 거래량은 작년 4390만 톤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배출권의 연평균가격은 1만1013원에서 2만9604원으로 올랐다.

다만 상장사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가 미흡한 상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주요 상장사 30개 사 중 24개 사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9개사는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아 기자 ljh@

씨스퀘어운용 “마켓컬리가 살렸다” 수익률 160% 올려 사모펀드 청산

씨스퀘어(CSQUARED) 자산운용이 2년 만에 160% 수익률로 사모펀드 청산에 성공했다.

해당 펀드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최근 쿠팡의 상장과 마켓컬리의 나스닥 상장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업 가치가 급등한 영향이다.

다만, 앞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로 이같은 수익을 거두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되면서 판매사는 물론 수탁사들도 100억 원 이하 소형 펀드는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씨스퀘어 자산운용은 최근 ‘씨스퀘어 유니콘 Pre 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6호’ 사모펀드를 수익률 162.58%에 청산했다. 펀드가 설정된 지 2년 만에 성과다.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라면 약 2억 60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액 세금도 붙지 않는다.

씨스퀘어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4월 마켓컬리 등 주요 새벽배송 업체에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팁트레시’에 투자 밸류 237억 원으로 총 15억4500만 원(1만 1887주)을 투자했다.

그리고 16억 원 규모의 5년 폐쇄형 사모펀드를 만들었다.

씨스퀘어자산운용은 성장하는 이커머스 거래액에 주목했고, 팁트레시 전방산업인 신선·가공식품 시장이 2~5조 원 수준에서 각각 15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탁사와 판매사들은 자체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다.

소형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다. 손염지 기자 eom@

www.bithumb.com

빗썬 지수 (2021년 4월 8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805,500	-67,000 (7.7%▼)	이오스	7,820	-685 (8.1%▼)
리플	1,250	-15 (1.2%▼)	트론	153	6 (4.1%▲)
라이트코인	285,800	-12,000 (4.0%▼)	스텔라루멘	631	-10 (1.6%▼)
에이다	1,523	-79 (4.9%▼)	비트코인에스비	307,800	-29,500 (8.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성착취물 3762개 불법 배포 1심 재판부 “해악 매우 크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

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검찰, 변호인 측 사정 등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올해 3월 11일 잇달아 연기된 뒤 이날 열렸다.

한편 문 씨의 공범 안승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문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수감 채우고 피의자 신문 대법 “국가, 위자료 지급”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감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을 한 것은 위법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검사는 이들의 수감을 풀어주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했다. 변호사가 15분간 항의하자 변호사를 강제 퇴거시킨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에야 수감을 해제하거나 변호인 참여 없이 수감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검찰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검찰이 연대해 총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 등이 우 전 대변인 등에게 각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기관이자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각 300만~500만 원을 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檢 ‘버닝썬 사태’ 승리와 유착 윤규근 총경 항소심 실형 구형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선고 시간 지나치게 짧아” ‘1심 재판부 무죄’ 판결 비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 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수인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



‘지진 체험’하는 어린이들

8일 대구 달서구 대구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지진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화재대피·자동차안전·지진 안전·승강기안전·보행안전·생명존중 등 6개 체험장으로 이뤄진 안전체험관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오전·오후 2회(1회 100명 이내) 운영한다.

뉴시스

됐다.

1심은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렵기도 하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재미 공감 통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채널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채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채널 TV)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는 행복, 말로 다 못하죠”

‘새내기’ 감정평가사 최기성

그는 감정평가사 사무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수습 생활을 갖 마치고 인터뷰 날부터 사인 권한이 생겼다. 그날 처음으로 평가서에 자신의 사인을 했다. 보람이 남다른 하루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 일을 마저 해야 한다고 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날 자정께에 퇴근했다. 요즘 일이 많아졌다고. 인터뷰 날에는 강북구 우이동과 수유동에 있는 현장 두 곳에 다녀왔단다. 그야말로 한창 현역이자 전성기를 살고 있는 이의 모습, 갓 수습 딱지를 댄 새내기 직장인의 모습이였다.

그럼에도 그에게서는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고회를 목전에 둔 터라 체력이 무리는 없을까 싶었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받쳐주는 편이라,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부진 그의 체격을 보니 마음은 물론 몸에도 견고하게 쌓인 내공이 보였다.

그는 성공적인 공직 생활을 했다. 198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정보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 1급 관리관에 해당하는 실장까지 오르고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표로 참여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퇴직 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국가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원의 이사직을 역임했다.

전 직장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된 그에게 고충을 물으니, 첫째로 짧은 게 오피스 프로그램이었다.

“엑셀이나 워드를 전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평가서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고유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익히는 데 되게 힘들었어요. 공직 시절에는 만 들어진 보고서를 검토하고 사인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다 작성하죠. 모르면 선배들한테 물어가며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드 엄청 잘해요. 회사 결정되고 나서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긴 했는데, 실무는 또 다르더라고요. 직접 부딪히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갔죠. 거기서 오는 성취욕도 있었고요. 지금은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 오직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 국가 안보와 국익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지금 있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그는 두 조직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해요.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준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담보 평가만 해도 이해관계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금융기관이죠. 우리가 평가를 잘못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영향이 개인뿐 아니라 은행에도 미치고, 그게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줘요. 과대평가를 하면 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공성이 가미된 일이에요.”

그가 몸담고 있는 삼일감정평가법인 역시 공정성을 지키며 신뢰받는 곳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부실한 감정평가를 미연에 방지한다.

나를 바꾸는 시간

그는 ‘슈퍼 갑’으로 수십 년을 살다 이제는 ‘슈퍼 을’이 되었다고 했다.

“공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머리 숙여본 적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고개만 까딱 하는 문화였어요. 아쉬운 게 없었어요. 남한테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영업도 해야 하고. 완전히 을이예요.”

어깨 힘을 빼는 일이 쉽지 않았다. 아내도 항상 “당신은 슈퍼 을이니 그런 자세로 대처해라”고 조언한다.

“그물을 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상처받기도 하고.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제가 존대를 했는데 상대가 알보면 기분이 나쁘죠. 마음 삭여가면서 일해서 지금은 많이 순화됐어요.”

2019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가 탄생했다. 최기성 감정평가사(67)로, 합격 당시 나이는 65세였다. 그는 그해 11월 삼일감정평가법인에 입사했다. 실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던 그. 직무상 대통령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미소조차 잘 짓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감정평가사로서 현장에 나가 감정평가를 하고, 영업을 하고, 연신 미소를 띠고, 고개를 숙인다. 2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감정평가사를 만났다.



국가정보원에서 20년 넘게 근무 ‘슈퍼 갑’으로 살다 ‘을’의 삶으로 어깨 힘 빼는 일 쉽지 않았죠

남은 인생 수십 년인데 은퇴 후 노는 게 더 어려워

입사 동기가 36세 낮은 자세로 마음 열어야 왕년에... 하면 나만 손해

현역으로 활동하니 자식들이 더 좋아해요



체질과 습관을 바꾸고, 냉대에 마음 아프던 시간을 감내하면서 사는 그를 보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그는 지난 공직 생활만으로도 경제적인 노후 대책은 이미 완비했다. 이 일을 생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충까지 참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퇴직할 땐 골프 치고, 등산 가고, 그런 생활을 생각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일에도 전해보라고 권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남은 인생이 수십 년인데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80-90세는 거뜰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단언한다. 일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

“사회생활인데 내 위치에 맞게 스스로 행동을 조절해야죠. 제가 고위직 출신이라고 어깨에 힘주면 밖에서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숙여줘야 저쪽도 마음을 열죠. 그래서 지금은 아내 말 잘 들었다 싶어요.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는 행복이 말도 못해요. 남들은 다 오늘 뭐 하지 하는데, 저는 맡겨진 일 하면서 활기차게 살잖아요. 사회적인 고충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병아리가 어미닭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하나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감정평가사는

변호사나 변호사와 맞먹는 전문직이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내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어요. 최고의 직업이죠.”

그는 인생을 통틀어 고시에 두 번 합격했다. 행정고시와 감정평가사 시험. 두 시험 공부할 때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기억력이다.

“행시 준비할 때는 젊은 시절이라 머리가 좋았죠. 한데 지금은 기억력이 안 따라줘요. 공부하고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서 답을 못 쓰겠더라고요. 애 많이 먹었죠.”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고시촌에서 명운을 건 심정으로 전력투구하며 공부했다. 반면 감정평가사 준비는 달랐다.

“친구들과의 골프, 자전거 라이딩, 저녁 약속을 다 마다하기엔 삶이 너무 황폐해지는 듯했어요. 먹고살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틈틈이 공부하다 보니 준비 시간이 길어졌죠.”

6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패혈증에 걸려 8개월을 투병하기도 했다.

“아내가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 있던 사람 괜히 들쭉서서 고생시켰다고요. 공부 좀 잘할 줄 알고 해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던 거죠. 게다가 패혈증까지 걸렸으니까요. 치사율이 50%인 질병이예요. 낮고 나니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기분이에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

함께 일하는 평가사들은 모두 그보다 한참 연배가 낮다. 나이가 많아도 40-50대. 함께 입사한 동기는 36세다.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노하우가 있을까?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나이 들수록 아집이 생겨요.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요. 항상 오픈 마인드로, 낮은 자세로.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왕년에 어땠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아무도 접근 안 하죠. 그럼 저만 손해예요. 외롭고. 그래서 항상 젊은 사람들 말을 많이 경청해요. 또 저는 말 안 놓고 깎듯이 대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많이 의존해요.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이따금 실수하면 대신 잡아내서 고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항상 저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죠.”

그는 슬하에 아들과 딸이 있다. 딸은 20대, 아들은 30대로 한창 직장 생활 중이다. 자신들과 다름없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아버지를 보며 무척 좋아하는단다.

“공부할 땐 둘이 의견이 달랐어요. 아들은 제가 혹시 공부하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만 하길 바랐고요, 딸은 ‘아빠, 공부 안 하면 뭐하실 거예요. 계속하세요’ 했어요. 요즘은 둘 다 너무 좋아해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저도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사니까 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요. 딸이 젊은 사람들과 입장에서 얘기해주니까 도움 많이 받죠.”

그에게 자극받아 함께 도전한 친구도 있다. 그보다 여덟 살 어린 행시 동기가 자신도 도전해도 되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는 흔쾌히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저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맨땅에 헤딩 하는 식이었어요. 이 친구한테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도와줬죠. 친구는 작년에 합격해서 지금 법인에 다니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의 모습에 용기를 얻어 새 삶을 찾아 나선 이가 많다. 그에게 도움을 꾸짖는 시니어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거예요.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앞으로 그만큼의 노는 거예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거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든, 취미를 발전시키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해야 해요.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swanicoco
NATURAL COSMETIC

겉과 속 2중 잠금으로 눈에 보이는 동안 피부

SWANICOCO ORIGINAL PURE AMPOULE

EGF & FGF 퓨어앰플

10ppm 99% 고함량 앰플
피부 흡수 촉진 기술 적용



스와니코코 전속모델 문예원

Charlotte
문예원

“AI의 감시·통제 악용되면 자유민주주의에 위협”

노벨문학상 수상 후 첫 장편소설 낸 가즈오 이시구로

인간·AI 우정 그린 ‘클라라와 태양’...선에 대한 희망·믿음
“한국은 흥미로운 문화의 근원지, 국제적으로 중요성 커져”

“선(善)에 대한 더 많은 희망과 믿음이 있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클라라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말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클라라와 태양’은 희망, 그리고 세상에는 선함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2017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일본계 영국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사진)가 신작 소설 ‘클라라와 태양’ (민음사)을 출간했다. 이시구로는 책 출간을 기념해 이투데이를 비롯한 한국 매체들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책은 노벨상 수상 이후 처음 발표된 장편소설이다.

책은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 소녀의 우정을 다룬다. 이시구로는 이번 책이 인간의 장기 이식을 위해 복제된 클론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작 ‘나를 보내지 마’ 보다 희망적인 소설이라고 언급했다.

“꽤 오래전 ‘나를 보내지 마’를 쓰고 있을 당시엔 제가 장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의식했습니다. 이 작품이 SF 장르로 분류된다는 점을 의식했죠.

이번에 ‘클라라와 태양’을 쓸 때는 제가 어떤 허구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클라라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AI 로봇이다. 이시구로는 클라라에 대해 “10대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외로워지지 않게 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AI 로봇”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집사와 같다”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거의 백지상태에서 소설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그녀에겐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저는 클라라가 마치 세상에 갓 도착한 아기처럼 처음으로 인간을 바라본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이시구로는 클라라가 지능을 가진 기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점도 마음에 든다고 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편견과 가치관이 거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과거에 짓눌려 있는 인물이 등장했던 이시구로의 소설들과 대조된다.



“인간 화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클라라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로서 기술적 관점, 기계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자들이 실제로 저를 따라서 세상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차원에서, 마치 지능형 기계의 눈을 통해 보는 것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시구로는 AI의 발전에 대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AI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악

용되지 않고 핵심 가치인 개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설의 배경은 영국이 아닌 미국이다. 이시구로에게 미국은 영국보다 젊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늘 변화를 겪는 나라로 다가왔다.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직접 개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사회, 과학과 기술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지만 사회는 아직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곳, 어두운 디스토피아적 사회이면서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이시구로는 자신의 책이 한국 ‘문화적 현장’의 일부를 이루게 돼 기쁘다는 소감도 전했다. 지난해 오스카 역사상 최초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것에 대해선 “한국의 대중문화가 훨씬 국제화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지난 10~15년 동안 한국이 문화의 근원지로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말해 주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을 삼성과 같이 기술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K팝 같은 흥미로운 문화의 근원지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흥미진진하고 현대적이고 새롭고 예술적인 작품들의 원천지로 여깁니다. 한국에서 읽히는 책들의 대열에 내 책이 함께하게 돼 기쁩니다.” 김소희 기자 ksh@

“중국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

페이팔 창업자, 구글·애플 저격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틸(사진)이 구글과 애플을 비난했다. 중국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 이유다.



7일 (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틸은 닌스재단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자국 기업과 중국 간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함께했다.

틸은 “중국은 모든 것이 민간과 군의 융합”이라며 “이로 인해 구글은 미국이 아닌 중국군과 효율적인 협력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들이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일했다고 전한 내부 관계자의 말을 듣고 슬펐다”고 덧붙였다.

틸은 또 “애플은 아이폰 공급망 대부분이 중국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애플은 중국과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애플이 중국과 대적할 가능성은 없다”며 “페이스북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다른 대기업은 중국 정부가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서 그렇게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CNBC는 틸이 보수 성향으로 유명하며 과거에도 기술투자 업계에 거침없는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이번 회의 참가자 역시 트럼프 인사들이 눈에 띈다.

틸의 발언에 구글 측은 “사실무근이며 우리 중국군과 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정병문 이화여대 화학나노학과 교수 한화토탈 ‘한화고분자학술상’ 수상

정병문(사진) 이화여대 화학나노학과 교수가 한화토탈이 제정하고 한국고분자학회 주관하는 ‘한화고분자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화토탈은 8일 열린 ‘고분자학회 춘계 총회’에서 올해의 한화고분자학술상 수상자로 정 교수가 선정돼 상패와 연구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용 고분자 생체재료 설계 합성 및 바이오 메디컬 분야 응용 연구’로 국내 의료 화학·소재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한화토탈은 기초과학과 석유·화학산업 기술의 근간이 되는 고분자 과학 발전을 위해 2005년 한화고분자학술상을 제정했다.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국내 고분자 과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과학자를 선정해 연구활동비 10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왔다.

정 교수는 “고분자 바이오 소재 응용과 관련한 연구를 20여 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이광형 KAIST 총장 “남들 가지 않는 길 가도록 돕겠다” 취임 후 첫 간담회 “성공확률 80% 이상인 연구는 지원 안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8일 “세계 ‘최고’보다 ‘최초’의 연구를 통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온라인 기자회견(사진)에서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은 연구에는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운영 비전으로 ‘QAIST’ 신문화 전략을 내세웠다. ‘질문’(Question)하는 학생, ‘연구 혁신’(Advanced research),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기술사업화’(Start-up), ‘신뢰’(Trust) 문화 등을 담은 핵심 키워드다.

이 총장은 “KAIST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만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것”이라며 “인성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 성적 지상주의를 타파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실험연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따라가는’ 연구가 아닌 무엇을 연구할까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4년 동안 미래 연구 분야 교수진 100명을



확보해 인공지능(AI)을 넘어서는 포스트 AI 연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AIST를 중심으로 총복 오송과 세종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월드’를 구축해 중소기업 애로 기술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부서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파격적인 창업지원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식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오른쪽) 한진 부사장이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은 가족과 그룹 임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조 회장과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가족은 추모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강원도 평창 월정사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조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모행사에 불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월 조 회장이 부친의 공동경영 유혹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기를 들었고 그해 4월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사진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 “과속·가속페달이 원인” 결론

2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과 커브길 주행 실수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뉴에버는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사고 당시 주행 속도가 시속 84~87마일(약 135~140km)이었고 나무와 충돌 당시는 75마일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이다. 또 비어뉴에버 보안관은 “우즈가 과속 주행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블랙박스(data recorder)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면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하는 동안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거나 패닉에 빠질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믿지만,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내부에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취한 흔적은 없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특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즈는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을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내 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는 사고 후 약 3주 만에 퇴원해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인사

- ◆환경부 ◇국장급 승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이윤범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은경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창 △녹색환경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이정미 △자연보전정책관실 국토환경정책과장 오훈진 ◇과장급 보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담당장 염규봉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임대차지원팀장 전성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정승현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경규 △수산정책관 김재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강용석 ◇국장급 승진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이윤범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신임 지회장 선임 △중국 다렌 전일 △멕시코 몬테레이 윤종섭 △사우디아라비아 젠타 강대옥 △인도 뉴델리 임태환 △미국 탬파 신소영
- ◆스포츠조선 △전무 한국선 △상무 박진형 △마케팅본부장 홍진혁 △경제산업팀장 부국장 전상희 △광고영업팀장 유종석 △스포츠전략기획팀 부장 남정석 △스포츠전략기획팀 부장 유동혁 △영상콘텐츠팀 부장 송정현 △디지털콘텐츠팀 부장 이유나
- ◆서울뉴스통신 ◇편집국 △산업부장 이민희

부음

- ▲최용철 씨 별세, 최익규·재희 씨 부친상, 이성재(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씨 장인상 = 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0일, 장지 국립기산호국원, 02-3010-2000
- ▲조분연 씨 별세, 류지영(신한생명 SK 김포센터장) 씨 시모상 = 8일, 대구 구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053-560-9041
- ▲박유종 씨 별세, 박진수(신화상사 대표)·창수(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부장) 씨 부친상 = 8일,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8호, 발인 10일 오전 9시, 055-712-0900

- ▲정필림 씨 별세, 이강희·미희(서울 노원구 보담대 원장)·동훈(우진산업 대표)·상훈(경향신문 DB관리팀 기획위원·전 사 진부장)·미경 씨 모친상, 정혁·성두용 씨 장모상 = 8일, 부산대동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51-550-9993
- ▲권영길 씨 별세, 권용갑(대구일보 경북지사 기자) 씨 부친상 = 8일, 경북 예천 장례식장 20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054-655-4442
- ▲김진분 씨 별세, 김충원(변호사)·창영(충남경찰청 교통과장) 씨 모친상, 노세호(충남경찰청 강력계장) 씨 장모상 = 7일, 대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특1호실, 발인 9일 오후 2시, 042-259-108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ESG의 본질은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ESG 지표와 평가에만 사로잡히면 오히려 본질적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학생이 실력을 키우지 않고 속성과외로 요령있게 공부해 시험점수만 잘 받는 것과 같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 총수가 ESG경영에 앞장서는 모습은 웬지 어색하다.

ESG 바람이 뜨겁다. 올해 들어와 갑자기 붓물 터지듯 ESG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영어 약칭으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ESG 경영수준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전세계 8500여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현황을 평가해 AAA부터 CCC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선진국의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는 이런 ESG 등급을 고려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기업에 ESG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ESG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ESG 부실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민간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콜버그

크라비스로버츠(KKR)와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환경 분야의 전문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은 연초부터 ESG경영을 선포했고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사적으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춤 시즌을 맞이하여 ESG전문가는 사외이사 영입 1순위로 몸값이 높아졌다. 정부까지 나서 중소기업에 ESG경영을 확산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ESG 인증기업에는 정책 자금 용자와 같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는 것이다. ESG경영이 인기를 끌면서 ESG에 관한 포럼과 아카데미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정부, 언론, 학계 모두가 뛰어들 정도로 ESG가 새롭고 중요한지 의문이 든다. 기업경영의 목표와 방향을 단기 수익 실적에서 친환경 성장과 사회적 기여로 전환시킨다는 측면에서 ESG경영은 긍정적이다. 다만, 너무 빠르고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걱정이다.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쏠림과 과열은 항상 급랭과 경착륙의 후유증을 낳는다. 쏠림현상과 소외증상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우선, ESG로 정부 지원과 민간 자금이 쏠릴 경우에 전통적 분야의 기업들은 사업이 위축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SG 투자 기조가 대세로 자리잡으면 굴뚝 산업의 제조업이나 전통 서비스업은 사양업종으로 소외될 것이다. 최근에, 금융기관들이 ESG 투자관행을 채택하면서 석탄발전소들이 자금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 ESG를 원칙대로 이행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소외될 것이 예상된다. 지금도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처한 중소기업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해 한해 연명하기도 벅찬 중소기업에 ESG까지 잘하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요구다. ESG를 내세워 제조 중소기업에 환관법이나 화평법과 같은 친환경 규제를 들이밀면 중소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ESG경영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경련이 500대 기업 대상으로 ESG 준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ESG 추진에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이런 비용이 자칫 제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가격을 상승하거나 협력 중소

기업에 전가되어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SG가 중요하기는 해도 전부는 아니다. ESG라는 그릇으로 기업경영에 관련된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이슈를 다 담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납품회사와의 상생협력은 ESG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다. 한 때 유행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금은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 ESG의 본질은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있다. 책임있는 경영, 그게 바로 ESG경영의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ESG 지표와 평가에만 사로잡히면 오히려 본질적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되어 책임은 뒷전이고 등급에만 매달리는 꼴이 된다. 학생이 실력을 키우지 않고 속성과외로 요령있게 공부해 시험점수만 잘 받는 것과 같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 총수가 ESG경영에 앞장서는 모습은 웬지 어색하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원칙대로 경영하면 저절로 ESG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워 특별히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는 ESG경영이 시대정신인지 잘 모르겠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자본주의는 경쟁과 인센티브 두 축으로 작동한다는 명제에 크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경쟁은 중세 봉건시대 수공업, 기술 분야 독점제체인 길드를 해체함으로써 중상주의 확대를 가져왔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탄생시켰다. 사적 소유 개념으로서 인센티브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생산과 성장의 중심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의 애스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쟁과 인센티브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포함한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제도도 이념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경쟁과 인센티브에도 부작용은 존재한다. 경쟁의 최대 부작용은 역설적으로 다른 경쟁을 막는 독점과 착취, 차별이다. 경쟁 승자의 사다리 걷어차기,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차별과 혐오, 배제, 습

페타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독점 등이다. 심지어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근본악이 경쟁적 서열 매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인센티브의 부작용은 가짜 성과와 분배 불평등이다. 사적 소유로서의 인센티브보다 추가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인센티브에서 부작용은 주로 나타난다. 필자가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기본급 외 추가 성과급이 높은 순으로 세 개의 그룹 모두에서 전체 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기반한 가짜 성과 또한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전체 성과에서 가짜 성과를 제외한 순수 성과만을 비교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네 번째 그룹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 우직한 사람이 산을 옮기는 결과가 나타났다.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가짜 성과 또는 성능 없는 성과를 양산하는 사회를 약물에 의존하는 도핑사회라 명명하였다. 그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회가 요구하는 성과를 약속하지 못하는 피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동차, 금융, 보험, 대리점 영업 및 판매와 같은 분야에서 인센티브가 도핑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사회는 부정행위를 사회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몰아간다. 특히 가짜 성과 양산을 개인의 역량으로 간주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얼마 전 타이어뱅크와 티스테이션가맹점 직원이 고의로 자동차 휠을 망가뜨린 후 교체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다. 티스테이션가맹점 관계자는 "이 업계에서는 솔직히... 그걸 역량으로 쳐주는 동네예요"라고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해 버렸다. 부정행위가 개인의 능력인 사회가 되었다. 최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등에서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공정성과 평등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왜 성과급 배분에서 임원과 직원 간 차이가 크냐는 것에 있다. 성과급 분배에 대한 갈등은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불거지지

않으나 과거보다 성과가 좋았거나 경기가 호황일 때 수면 위로 등장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판매액 변동성이 클수록 비임원인 중간 관리자 간의 임금 격차는 크지 않다. 반대로 판매 변동성이 미미하고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가 커졌다면 임원과 비임원의 임금 격차는 늘어났다고 한다.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과급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계량적 접근은 분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배 이후 인센티브는 오히려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애정, 헌신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포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인센티브만 연구한 새뮤얼 볼스가 '도덕경제학'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나쁜 인센티브는 구성원의 화합, 전통적인 규율과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 전체 떡 크기는 작아지는데 내 몫만 커지면 문제 없게 만드는 이상한 인센티브 말고 회사와 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인센티브를 기대해 본다.

☆ 디트리히 본 회퍼 명언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독일의 목사. 그는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나약하며 그 나약함으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강림했다고 역설했다. 반(反)나치운동을 펼친 그는 히틀러 암살계획을 세웠다. 폭약은 터졌지만 히틀러는 살았고 모의한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오늘은 그가 생을 마감한 날. 1906-1945. ☆ 고사성어 / 척활지굴(尺蠖之屈)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다시 펴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이다.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현재의 굴욕을 참아야 한다는 뜻. 원전은 주역(周易) 계사(繫辭) 하편.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다시 펴기 위함이다' [尺蠖之屈以求伸也], 용과 뱀이 겨울에 칩거하는 것은 봄을 위하여 그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치밀하게 생각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서는 것은 세상에 널리 쓰기 위함이고, 쓰는 것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덕을 숭상하기 위함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좋은, 나쁜, 이상한 인센티브

지난해 모 증권사 PB인 A 씨(20대)는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면서 일했다. 동학개미 시대가 열리자 영업장은 계좌개설부터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고객들로 붐볐다. 그래도 즐거웠다고 한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런 A씨가 올해는 작년만큼 신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증권사가 올해부터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인에서 지점별 실적으로 바꾸면서다. A씨를 비롯한 MZ세대 동료들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기존 성과급제는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팀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A 씨는 또 한 번 당혹스러웠다. 성과급 기준 변경을 위해 회사가

마련한 투표용지와 마주하면서다. 투표용지는 마치 음식점 입구에 놓인 출입 명부 와도 같았다.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게 한 것처럼 투표지는 '누가 동의하고 안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상급자는 "괜찮아,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라고 말

했지만 A 씨는 결코 편할 수 없었다. 이날 익명 사내 커뮤니티에선 지점별 투표 현황을 전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반대하기 힘든 신입사원들부터 들어오라고 하면서 투표를 받네요", "지점장 보는 앞에서 반대 찍으려고 하니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등이 있다. 올해 초 SK하이닉스가 불 지핀 성과급 논란이 증권가로도 번졌다. 일각에선 성과급 논쟁의 촉발점 중 하나가 투명성과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와의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단순히 '세대 갈등'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땀 흘린 대가에 대해 발언권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되길 바란다. 그라야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근로 여건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참, A 씨 역시 투표용지에 '동의'라고 썼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상사가 정성평가(定性評價)하는 내용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고 전했다.

☆ 시사상식 / 카피타이거(copytiger)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한 후 사사만의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해 성장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사 모델을 가져다 서비스하는 카피캣이라는 용어에 '캣' 대신 '타이거'로 대체해 만든 조어. ☆ 신조어 / 지인지조 '지가 지 인생 조진다' 줄임말. ☆ 유머 / 부부싸움의 시작 "우리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라고 물으면 아내가 고마워하며 흐뭇해하는 얼굴을 볼 생각에 기뻐다. 집에 오자마자 물으니 아내의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라고 했다. 생각과 달리 말이 헛나왔다.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유혜림 자본시장부/wiseforest@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했지만 A 씨는 결코 편할 수 없었다. 이날 익명 사내 커뮤니티에선 지점별 투표 현황을 전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반대하기 힘든 신입사원들부터 들어오라고 하면서 투표를 받네요", "지점장 보는 앞에서 반대 찍으려고 하니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A 씨는 결코 편할 수 없었다. 이날 익명 사내 커뮤니티에선 지점별 투표 현황을 전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반대하기 힘든 신입사원들부터 들어오라고 하면서 투표를 받네요", "지점장 보는 앞에서 반대 찍으려고 하니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A 씨는 결코 편할 수 없었다. 이날 익명 사내 커뮤니티에선 지점별 투표 현황을 전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반대하기 힘든 신입사원들부터 들어오라고 하면서 투표를 받네요", "지점장 보는 앞에서 반대 찍으려고 하니깐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슈&인물

광고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

민선정 이노션 캠페인본부 팀장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힘, 바로 콘텐츠”

“자기가,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그거 예뻐! 아무거나 입어. 똑같아.” “나, 안 가!” 한 부부가 등장하는 영상. 남편이 던진 말에 웃을 고르던 아내는 화를 낸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남편의 컴퓨터 전원을 꺼 버리고, 남편은 주말에 밖에 나가 놀자는 아내를 뿌리친다. 서로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1분 가까이 이어지지만, 영상은 상대를 정의하는 말을 남기며 끝난다.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부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은 이 영상은 ‘KCC건설 스위첵’ 광고다. 일반적인 아파트 광고처럼 멋들어진 건물 외관이 등장하거나 소유 가치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집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삶’을 다룬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대한민국 광고대상·서울영상광고제·올해의 광고상·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등 국내 대표 4개 광고제에서 본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온라인상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해 7월 유튜브에 게시된 광고는 지금까지 3524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3000개 가까운 댓글도 달렸는데, 광고 영상으로는 이례적이다.

‘문명의 충돌’은 현대차그룹의 광고 계열사 이노션이 제작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투데이가 ‘문명의 충돌’ 기획을 담당한 민선정 이노션 캠페인본부 기획 7팀장은 5일 만났다.

찾아보는 콘텐츠로 소비되는 광고

“실제 생활 속 부부들이 충돌하는 에피소드를 엮어 최대한 현실감을 살리려고 했어요. 광고 같지 않은 ‘톤 앤 매너(전체적인 콘셉트)’와 부부 못지않은 호흡을 보여준 김남희, 박예니 배우의 생활 연기가 더해져 많은 분이 본인 이야기 같이라며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민 팀장은 ‘문명의 충돌’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덕분에 큰 공감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너무 광고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방송 광고 심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곤혹하기도 했지만, 되레 이 점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노션이 담당한 KCC건설 스위첵 캠페인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것’보다는 ‘살고 싶은 곳’으로 바라보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가족, 그 안에서 발견한 집의 가치를 화두로 던진다. 2019년 공개된 ‘엄마의 빈방’ 편에서는 사춘기를 맞이해 방문을 받는 딸과 그 앞을 서성이는 엄마의 모습을 담아 많은 이의 공감을 불러왔다.

지난해 선보인 ‘문명의 충돌’ 편은 부부라는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한다. 민 팀장은 “혈연의 가족과 달리 부부는 서로 살아온 환경부터 삶의 방식 등 모든 점이 다른 두 남자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광고주와 이런 주제로 아이디어를 나누던 중 부부란 마치 거대한 두 문명이 충돌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번 캠페인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문명의 충돌’ 광고 영상에는 지금도 누리꾼의 호평이 이어진다. ‘이 광고 만드신 분 상주세요’, ‘이 광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 등의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고



민선정 이노션 캠페인본부 기획 7팀장은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세상에 좀 더 이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이노션

지난해 선보인 ‘문명의 충돌’ 편 광고제 휩쓸고 온라인 칭찬 댓글 ‘현실 부부 이야기가 공감 이끌어’

코로나 이후 ‘숲 게임’ 앱 선보여 1년 동안 1만여 그루 나무 키워 곧 삼척에 ‘탄소 마시는 숲’ 조성

광고 아이디어 얻기 ‘생각의 탐닉’ 세상에 좀 더 이로운 프로젝트 공감·공유할 수 있는 캠페인 진행



부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 공감을 이끌어 낸 이노션의 KCC건설 광고 ‘문명의 충돌’.

있다. 민 팀장은 ‘나처럼 찾아와서 광고 보는 사람 많네’라는 평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광고에 이렇게 많은 분이 댓글을 남겨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요. 광고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콘텐츠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물론, 솔직한 마음으로 ‘광고 만든 사람들 보너스 줘야 한다’ 이런 댓글도 너무 행복했어요.” 민 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현상에 의문 갖고 만든 프로젝트

민 팀장은 10년 전 이노션에 합류해 카오페이, 현대카드, 대한항공 등의 캠페인을 맡았다. 지금은 KCC건설, 한화그룹, 오늘의 집, 휴테크 캠페인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민 팀장은 현실에서 부딪치는 여러 현상에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한화그룹의 ‘태양의 숲’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태양의 숲’은 태양광 에너지로 묘목을 키워 진정한 의미의 탄소제로 숲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한화는 숲 조성에 필요한 묘목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미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10년 전부

터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몽골, 중국 등 사막화 지역과 국내 매립지에 지금까지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축구장 180개 규모의 숲을 조성했다.

민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에서 나무 심는 일이 어려워지자 이노션 크리에이티브 알파팀과 함께 태양의 숲 게임 앱을 출시했다. 태양의 숲 게임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햇빛을 비추면 조도 센서가 빛을 인식해 앱에 구현된 태양광 패널 에너지를 채우고 식물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식물이 자라면 ‘정원심기’ 기능을 통해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다.

이노션은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나무를 키우면 한화가 실제 나무를 심어주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실천하면서도 손쉽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경험을 제안한 결과, 많은 참여가 이어졌다.

민 팀장은 “1년 동안 태양의 숲 게임에서 기증된 나무는 약 1만800그루에 달한다”며 “드디어 이달 20일 강원도 삼척에 ‘탄소 마시는 숲’이 탄생한다. 그야말로 언택트(Un-tact)를 온택트(On-tact)로 이어주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끊임없는 고민과 창조 필요한 작업

광고 기획은 끊임없는 고민과 창조가 필요한 작업이다. 영감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민 팀장은 ‘생각의 탐닉’이라고 답했다.

“아이디어를 고민하다 보면 다른 분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들여다보게 돼요. 영화나 책, 칼럼도 좋고 SNS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광고가 아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죠. 다양한 생각을 가득 채우면, 그 생각의 파편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더라고요.”

민 팀장은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녀가 광고에 매력을 느끼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세상에 좀 더 이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회와 업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획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사설

돌아선 민심, 국정 다 바꾸려는 준엄한 요구다

4·7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집권 더불어 민주당이 참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개표 집계를 완료한 결과, 서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를 득표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39.2%)를 18.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부산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7%를 얻어 민주당 김영춘 후보(34.4%)를 거의 2배 격 차로 눌렀다. 이들은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시장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의 기록적 패배다.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지난 5년간의 전국 단위 네 차례 선거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 특히 서울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정치지형이 뒤집혔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의 단체장을, 국회의원 49석 중 41석을 휩쓸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여당 후보를 이겼다.

이번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차원을 넘어, 11개월 뒤인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수도 서울과 2대 도시 부산의 유권자가 1136만여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3분의 1에 이른다. 결국 이번에 표출된 민심은 내년 대선의 판세를 흐드는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냉정했고, 정권의 실정(失政)을 가차없이 심판했다. 여당과 야당의 압도적 표 차이가 말한다. 여

권은 그동안 의회와 행정, 사법 등 전방위의 권력을 장악해 오만한 폭주를 거듭해왔다. 경제성장고 일자리, 부동산, 세금, 기업정책 모두 실패하면서 국정의 무능난 돋보였고, 코로나 방역을 자랑했지만 백신 보급 후진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정권이 공들여 온 대북 관계는 계속 거꾸로 간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들 스스로는 내로남불의 위선과 불공정을 일삼았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드러난 것이 이번 선거다.

여권은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겠다고 한다. 민심의 요구는 그동안 총체적 실패만 거듭해온 국정의 일대 쇠신이다. 남은 시간은 별로 없지만, 실패한 정책을 통렬히 반성하고 기초를 모두 바꿔야 한다. 전면적인 인적 쇠신도 필요하다. 반(反)시장·반기업 이념에 매몰된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 우선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제대로된 법치의 안정이 국정 전환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급격히 가속될 게 틀림없다. 정국은 내년 대선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야당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번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응징이지, 야당을 신뢰해서 표를 준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이 구태를 벗지 않고 수권(受權)의 역랑과 비전을 입증하지 못하면 또다시 내년 대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 우리말 한 토막

발소리와 발자국

“쿵쿵쿵” “쿵쿵” “쿵쿵쿵쿵” 처음에는 주말 낮에만 소음이 들려왔다. 그러다가 평일에도, 늦은 밤에도 쿵쿵 거리는 소리가 잦아졌다. 주말에만 손자를 돌봐주던 외할아버지가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매일 보살피게 되면서 소음이 심해진 것이다.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뛰놀고 싶은 게 어린아이들이니 참고 견디려고 했지만, 결국 이사로 그 소음에서 벗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밖보다는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일까. 요사이 뉴스에 이웃주민 간 다툼의 주범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심찮게 나온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란에는 호소글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 “쿵쿵거리며 걷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뛰어나니 내는 발자국 소리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해요.” 충분히 공감 가는 하소연이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마음에 걸린다. 시나 노래말 등에서 ‘발자국 소리’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의미한다. ‘범인의 발자국을 찾았다’처럼 발자국에는 소리가 없다. 발을 딛고 난

뒤의 흔적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발자국에 소리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 어학자는 언중이 단어 관계보다는 어구 형태로 기억해 잘못된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발자국 소리’만큼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발자욱’도 있다. 시와 같은 문학작품에서 맞춤법에는 어긋나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비표준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발자욱이 대표적인 시적 허용 표현인 것이다. 발자욱은 비표준어이므로 일상에서는 틀린 표현이다.

그렇다면 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발소리’라고 해야 맞다. 발을 옮겨 디딜 때 발이 바닥에 닿아 나는 소리를 뜻한다. “눈 녹은 길을 저벅저벅 걷는 아이의 발소리가 들린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발걸음 소리’ 또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발걸음은 발을 옮겨서 걷는 동작을 뜻하는 말이므로 모양뿐 아니라 움직임도 포함한다. “발걸음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지” “쿵쿵 내딛는 발걸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처럼 둘 다 쓸 수 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쿵쿵쿵 발소리를 내며 달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이기에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p>기업·개인 통합뱅킹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p>	<p>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p>	<p>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p>	<p>경영 지원 세무,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p>	<p>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p> 
--	---	---	--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185호(2021.03.25) 게시기한 : 2022.03.24 ·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